

북한의 양면성



장용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은미(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강좌' 시리즈의 41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는 북한의 표면적인 주장과 북한 현실과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북한사회에서 보이는 모순적인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uniedu.go.kr/ebook

이 책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1

북한의 양면성

Contents

01

왜 양면성인가?

6

02

정치·군사 분야의 양면성

1. 인민민주주의와 세습독재 ————— 10
2. 강성국가와 후진성 ————— 20
3. 자주노선과 대외의존 ————— 31
4. 민족공조와 대남도발 ————— 40

03

경제·사회 분야의 양면성

1. 계획경제와 개인경제 활동 ————— 50
2. 배급제와 시장 ————— 60
3. 평등사회와 성분차별 ————— 70
4. ‘혁명의 수도’ 평양과 지방 ————— 78

04

주민생활과 가치관 분야의 양면성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90
2. 공식매체와 비공식정보 ————— 96
3. 사회통제와 일탈 ————— 105
4.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와 인권침해 ——— 113

05

북한 양면성의 지속과 변화

————— 122





CHAPTER 1

제1장

왜 양면성인가?

제1장

왜 양면성인가?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통합하는 기제로서 공식적 또는 지배적인 가치나 이념, 체계들이 존재한다. 그와 동시에 공식적 또는 지배적인 가치나 이념과는 다른 현실도 존재한다. 그리고 현실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식적 또는 지배적인 가치나 이념, 체계도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나 세력들 간의 관계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집단에 의해 생산된 공식적인 가치나 이념, 체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상과 변화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는 그 사회의 변화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선전되거나 설명되는 가치, 이념, 체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현실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배집단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전되고 있는 북한을 실존하는 북한으로 오해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 개방을 통한 국제적 협

력 확대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부하면서 비민주적이며 억압적인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식적인 선전담론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체제전환 압력에 직면하여 내세우기 시작한 소위 '우리식' 담론은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 '우리식'이 전통적인 자주성을 재강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내외적인 변화의 압력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현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수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도 겪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가치, 이념, 체계의 이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치, 이념, 체제 선전의 담론들이 결과적으로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또한 북한의 양면적인 성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 '과거에 존재했던 북한'을 '오늘의 북한'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닌 양면적 성격을 간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양면성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이 책은 현재 한반도의 북쪽에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식적인 가치나 이념, 체계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의 실상을 정치·군사, 경제·사회, 주민생활과 가치관으로 대별하여 살펴본다.



CHAPTER 2

제2장

정치·군사 분야의 양면성

1. 인민민주주의와 세습독재
2. 강성국가와 후진성
3. 자주노선과 대외의존
4. 민족공조와 대남도발

제2장

정치·군사 분야의 양면성

1. 인민민주주의와 세습독재

1)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북한은 자신을 소위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 정권의 성격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single party dictatorship)와 수령의 개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가 결합된 혼합독재정권(hybrid dictatorship)으로서¹⁾ 수령과 관료가 주민을 지배하는 독재정권의 일종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정권(political regime)이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정치권력의 중심 조직(organization)이자, 그 조직과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로서 누가 정치권력을 가지며,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결정한다.²⁾

1)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통일연구원, 2012, pp. 189~190.

2) Robert M. Fishman, "Rethinking State and Regime: Southern Europe's Transition to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42, No. 3(Apr., 1990), p. 428.

즉 정권의 성격은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와 그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은 크게 민주적인 정권과 독재정권으로 구분된다. 이 때 민주적인 정권은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그에 따른 권력교체가 존재해야 한다. 민주적인 정권으로 규정하려면 최소한 ①최고통치자가 선출되어야 하고 ②입법기관이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야 하며 ③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이 한 개 이상 존재해야 하고 ④ 권력교체가 발생해야 한다.³⁾ 반면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민주적이지 않은 정권들은 독재정권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권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은 자신을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12조에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착취계급을 비롯한 적대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독재를 의미하며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수립되어 공산주의가 건설되고 존재하는 전 기간에 존재하는 것이다.⁴⁾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주고

3) Jennifer Gandh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Doctori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4), p. 13.

4) 이하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에 대한 북한의 설명은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백과사전출판사, 2001, pp. 653~654 참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삼고 있지만 착취계급과 그 잔여분자들,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의 반혁명책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낡은 사상에 젖어 법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 역량인 혁명적 당과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引傳帶),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근로단체들이다.

북한은 또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든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⁵⁾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사회의 공동이익 옹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런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은 동지적 사랑과 상호협조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에 사회성원들 간의 자유와 평등은 항상 갈등과 상호견제를 동반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이 ①광범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인민대중 스스로 관철하는 것이며 ②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5) 이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정치·법부문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제3권, 백과사전출판사, 2009, pp. 180~181 참조.

①근로인민대중을 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고 국가정치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②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온갖 적대행위에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 ③사회주의 경제문화건설을 잘하고 ④넓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이끄는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존재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 하에서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수령은 그의 최고뇌수이며 핵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수령을 떠나서는 발생하고 존재할 수 없으며 그의 위력은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대중이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심단결되어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의 민주주의, 적대세력에 대한 독재와 통제,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핵인 수령의 존재를 특징으로 한다.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정들은 북한 헌법에도 존재한다. 먼저 헌법 8조에서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민들의 주권행사와 관련

하여 헌법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6조와 7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하고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지며,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장대로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 자체는 형식적이거나 존재함을 의미한다.

2) 수령-당 독재와 권력세습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인민대중의 민주주의가 선전되지만, 그보다는 적대세력에 대한 독재나 이와 연관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통제가 중시되는 가운데,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강조되고 무엇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에 대한 충성과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이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지닌 현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제반 규정은 수사나 선전의 의미 이상을 지닐 수 없게 된다. 대신 수령과 당의 영도가 강조되면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북한 정권은 다양한 비민주적 정권 또는 독재정권의 일종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정권의 성격 규정에 따라 북한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당과 내각, 군을 구성하고 있는 관료들이며,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집단이 당 관료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노동당 규약에 당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당은 광범위한 군중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의 이러한 영도적 위상과 역할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북한에는 노동당 이외에도 조선천도교청우당이나 조선사회민주당이 존재하지만 이런 정당들은 실제로 정당조직을 갖추고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이들의 활동이 대부분 대남비난 성명 발표나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름뿐인 정당이라 할 수 있다.⁶⁾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관료지배사회의 일종으로서,⁷⁾ 북한을 지배하는 집단은 당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며, 북한의 정권은

6) 통일연구원 편,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2009, p. 53.

7)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북한 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 (2009).

일당독재정권(single party dictatorship)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일당독재정권은 기본적으로 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정권유형이다. 당은 군까지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기구를 장악, 통제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회, 각종 언론매체 등 거의 모든 정치적 영역을 지배한다. 이런 가운데 다른 정당으로의 권력교체도 발생하지 않는다.⁸⁾ 북한의 경우도 노동당이 사실상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와 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각종 근로단체 등을 통해 사회를 조직, 동원하면서 언론매체까지 통제하고 있다. 당은 또한 선거도 통제한다. 당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선거운동에서도 선전·선동연설만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쟁적인 득표활동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100% 신임투표가 유도된다.⁹⁾

한편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은 북한정권의 개인독재(personal dictatorship) 성격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수령과 후계자에 대한 북한의 설명을 보면¹⁰⁾ 먼저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 뇌수’이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8) Natasha M. Ezr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pp. 191-200;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June, 1999), pp. 121-122.

9) 김일기 외, 「통일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통일·북한 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2012, pp. 51-53.

10)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정치·법부문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제3권, pp. 224-229.

가지고 있다. 이는 수령이 ‘사상의지적 단합의 중심’으로서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이 정확히 반영된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조직적 단결의 중심’으로서 ‘혁명조직 건설을 위한 옳은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며 사람들 속에서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①역사 발전의 합법직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②혁명이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③근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은 ①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는 ‘탁월한 사상이론가’ ②세련된 영도예술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걸출한 지도자, 정치가 ③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덕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닌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이 개척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대를 이어 수령과 같은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수령의 후계자에 의해 계승되고 영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인 수령의 후계자를 바로 추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수령의 모든 사상정신적 풍모와 특질을 그대로 체현하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고 있으며 수령의 가장 큰 신임과 총애를 받고 인민대중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 사랑을 받는’ 지도자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실

제로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하 김정은)으로 수령의 지위를 3대째 세습하고 있다.

3대 세습은 그 어떤 독재체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권력세습이다. 권력을 세습하고 있기에 후계자의 권력승계에서 선대수령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무엇보다 세습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대수령의 유훈이 중시되고, 선대수령의 유산과 유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승계와 공고화 과정에서 확인된다. 김정은은 소위 김정일의 ‘10·8 유훈’에 따라 정치국 결정으로 최고사령관직을 승계하였다.¹¹⁾ 그리고 그에 앞서 김정일의 사망 직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이 공동으로 김정일의 유훈을 지키고 소위 ‘혁명업적’을 빛내겠다는 결의를 발표하여 유훈과 유업계승을 천명하기도 하였다.¹²⁾

김정일의 유훈에 의지해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정권은 권력승계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의 우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일을 대원수로 추대하고,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국가명절인 광명성절로 지정하였으며, 노동당 규약에 소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하고 헌법도 김일성과 김정일

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

12)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9일.

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하면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김정일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린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로 이상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김일성종합군사대학, 만수대 의사당 등에 김정일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권력세습이 발생하는 이유는 독재자와 권력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세습이 수령제라는 북한의 정치제도외에도 무관하지 않지만,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력공백 방지와 후계자의 현직 독재자 제거 우려에 따른 왕-왕자 딜레마(crown-prince problem)를 해결하고 특히 권력엘리트 중 하나를 후계자로 지명할 경우 독재자 사후 발생할 권력엘리트 간의 권력투쟁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¹³⁾

한편 최고지도자의 선택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은 결국 수령과 당의 지도와 통제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본질은 ‘인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독재’인 것이다. 이는 수령 중심의 유일체계확립에 대한 강조에서도 재확인된다. 북한이 내세우는 유일체계는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이다.¹⁴⁾

13)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04 (July 2007), pp. 604~605.

14) 철학연구소(사회과학원), 「철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88.

실제 북한사회가 유일체계처럼 작동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정권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제도나 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유일체계는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통제 의지와 독재적 성격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한이 아무리 ‘인민정권은 인민 자신이 세우고 그들 자신이 운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고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은 인민정권 건설의 근본원리’라고 선전해도 국가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을 수행하며¹⁵⁾ 통일적 지도의 중심에 당과 수령이 존재하고 그 수령의 지위가 세습되는 가운데 계급적 적대세력에 대한 독재를 빌미로 주민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 북한 정권은 개인독재와 일당독재가 결합된 혼합독재정권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다.

2. 강성국가와 후진성

1) 인민대중 중심 우리식 사회주의와 강성국가

북한은 자신을 소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비전이자 전략으로 강성대국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제반 분야에서

15) 진문길, “우리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률」, 제 58권 3호 (2012), p. 96.

저발전과 후진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긴장과 불안정 속에서 정권과 체제의 생존에 급급해 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80년 말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한데다 소련과 함께 사회주의권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중국마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으로 고전적인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체제로 전환해가고 있던 상황에서 등장하여 1990년대 초 김정일에 의해 정식화되었다.¹⁶⁾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체제의 정체성으로 천명되던 시기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국제적 고립에 처하게 되면서 자신의 체제 존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김정일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지닌 공고성과 불패성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다며 정권과 체제의 존립은 주민들에게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강요하고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며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체제전환이나 중국과 같은 점진적 체제전환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였다. 나

16)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0~80.

아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며 위기상황에서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소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 직후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영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강성국가건설에 한 몸 다 바치는 견결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견지를 천명하였다.¹⁷⁾ 또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을 김정일의 유훈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권력세습의 정당성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강성국가론은 이러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⁸⁾ 강성국가론은 당초 강성대국론에서 시작되었다.¹⁹⁾ 북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당시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 절정에 달하였던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한·중수교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심각한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 전 주석(이하 김일성)이 사망하여 정치적 위기마저 가중되던 상황에서, 대외교역의 급격한 위축과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침체에 더해 1995년부터

17)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노동신문』, 2011년 12월 27일.

18) 정우근,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전략: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2004), p. 37.

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마저 겹쳐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체제와 정권의 존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고 각자 알아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자력갱생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하였던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표 1〉 북한의 1990-1998년간 경제관련 주요지표

구분	단위	'90	'91	'92	'93	'94	'95	'96	'97	'98
명목 GNI	조원 (억달러)	16.4 (231)	16.8 (229)	16.4 (211)	16.4 (205)	17.0 (212)	17.2 (223)	17.3 (214)	16.8 (177)	17.6 (126)
성장률	%	-3.7	-3.5	-6	-4.2	-2.1	-4.1	-3.6	-6.3	-1.1
예산	억달러	166	172	185	187	192	N.A	N.A	91	91
국물	만톤	402	442.7	426.8	388.4	412.5	345.1	369	348.9	388.6
비료	만톤	88.9	80.4	77.5	90.1	73.8	67.6	53.6	43.1	39.2

* 출처: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http://www.bok.or.kr/index.jsp/>(2008년 9월 7일 검색).

19) 북한이 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변경한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준을 하향조정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강성대국의 목표수준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하는 징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례로 북한은 당초 1986~87년 수준(1인당 국민소득 2천700달러)의 경제회복을 2012년까지 달성해야 할 강성대국의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이를 달성할 '전망적 근거 마련'을 목표치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김병로, "북한,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의 목표를 낮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칼럼』 2011년 9월 22일, <http://tongil.snu.ac.kr/index.html> (검색일: 2012년 8월 29일). 북한은 또한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인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여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강성국가 대문을 여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일.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고 소위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들어 가면서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²⁰⁾ 이러한 강성대국론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면서 국가전략으로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지니게 되었다. 북한은 2007년 11월 30일~12월 1일 개최된 지식인대회에서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에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고조’를 강조하였다.²¹⁾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²²⁾ 강성대국론은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가장 웅대한 국가건설목표’로서 ‘작은 나라는 대국이 될 수 없다는 기성관념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 정치에 의해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돌파하고 강성대국을 향한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며 크게 ①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②군사강국의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③경제강국과 ④과학문화강국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선전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사상강국을 모든 사회 성원들이 혁명적 수령관으

20) “김정일 총비서의 숭고한 애국애족리념”, 『노동신문』(1998.7.12.);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노동신문』(1998.8.11.); “청년들은 당의 위업에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노동신문』(1998.8.28.);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을 빛내이시는 걸출한 령도자”, 『노동신문』(1998.8.28.); “승리자의 50년”, 『노동신문』(1998.9.1.);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1999.1.1.) 등 참조.

21) 장용석,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헤징(hedging) 전략”,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 (2012), p. 51.

22) 이하 강성대국론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 327~382 참조.

로 튼튼히 무장한 나라로 규정하고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위력이 수령, 당, 군대, 인민의 통일단결이 확고히 실현된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와 인민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만든 결과라고 선전한다. 북한은 또한 군사적 대결전에서의 승패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시대에는 군력이 국력의 정수이기에 군사강국이 되지 않고서는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설 수 없다며 군사력 건설을 강조하면서 ‘선군정치의 우월성’이 군력을 핵으로 하여 전반적 국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게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북한은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이 군사강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치게 하는 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방공업의 발전도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인민군대는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고 조국은 위력한 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며 군사강국의 지위에 이미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군사강국과 관련하여 북한은 특히 핵보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라고²³⁾ 핵보유를 과시하고, 김정일이 탁월한 선군정치로 치열한 반미핵대결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끌면서 핵보유의 대업을 이룩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강성국가건설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

23)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일 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5일.

력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²⁴⁾

한편 이러한 선전과 달리 권력공고화 과제를 안고 있는 김정은은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라며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존엄과 자주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라며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²⁵⁾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미 위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경제강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력이 국력을 재는 중요한 척도이자 강성대국의 물질적 토대이기에 ‘정치와 사상, 군사와 문화 등은 튼튼한 경제력에 토대할 때만 원만히 발전할 수 있다’며, 이제 경제강국만 실현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에 경제강국 건설을 강성대국 건설에서 제일 힘을 넣어 추켜세워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내세워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고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혁명적 군인정신과 기풍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는’ 선군정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과학문화의 전성

2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노동신문」, 2013년 4월 2일.

25)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은 동지의 연설”

기는 강성대국의 중요지표'라며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과 체육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양양을 이룩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추동력'이고 '경제력과 군사력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될 때에만 강성대국의 지위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과제로 경제강국과 과학문화강국 건설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권력의 안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주민생활 향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면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하며 과학기술발전에 의하여 경제와 사회발전의 높이와 속도가 규제되고 있는 현시기에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고²⁶⁾ 강조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가장 선진적인 문명국으로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²⁷⁾

26)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하여》를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2) 북한 사회의 후진성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근력
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
며²⁸⁾ 강성국가 건설이 마치 가까운 장래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의 현실은 전반적인 후진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평가한
다양한 지수들에서 확인된다.

먼저 미국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이 포린폴리시(For-
eign Policy)와 공동으로 178개국에 대해 12개의 핵심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지표와 100개 이상의 하위 지표에 따라 안정성(sta-
bility)과 직면한 도전(pressures)의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
는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를 보면 2012년의 경우 북
한은 120점 기준으로 95.5점을 받아 96.2점인 미얀마와 94.5점
인 에리트리아(Eritrea) 사이에서 22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1위는
114.9을 받은 소말리아였으며 한국은 37.6점으로 39.5점인 체코
와 35.6점인 싱가포르 사이에서 156위를 차지하였다.²⁹⁾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해 전세계 13개 기관들의 조사와 평가 자료를 기초
로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지

28)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

29)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2012,” <http://www.fundforpeace.org/global/library/cfsir1210-failedstatesindex2012-06p.pdf>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2013년
의 경우 북한은 95.1을 받아 한 단계 내려간 23위를 차지하였다(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3/06/24/2013_failed_states_interactive_map (검색일: 2013년
6월 28일)).

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보면 북한사회의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와 같은 8점을 받아 조사 대상인 176개국 중에서 공동 꼴찌인 17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북한이 가장 부패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지수에서 한국은 56점을 받아 45위를 차지하였다. 부패인식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깨끗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⁰⁾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정치적 권리에 대한 10개의 항목과 시민적 자유에 대한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195개국과 14개의 관련 자치령(territory)의 자유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 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를 보면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후진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3년 지수를 보면 북한은 가장 자유로운 1점과 가장 자유롭지 못한 7점 사이에서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권리 모두 7점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Not Fre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³¹⁾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이래 계속해서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자유 모두에서 7점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다수 주민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2013년 3월 발

30)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in_detail/#myAnchor1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31) "Freedom in the World 2013",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3>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표한 ‘곡물전망 및 식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³²⁾ 북한은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36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된다. FAO는 아프리카 28개국과 아시아 6개국, 남미와 카리브해 2개국을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속한 북한은 예멘과 함께 전반적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80만 명의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위기에 시달려 왔고 해마다 50~100만 톤 가량의 상업적 수입이나 외부지원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2/13 곡물회계연도의 경우에도 50만7천 톤이 부족하고 북한이 상업적으로 수입할 30만 톤을 제외하더라도 20만 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³⁾

〈표 2〉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단위: 만톤)

구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생산량 ¹⁾	431	454	448	401	431	411	(425)
도입량 ²⁾	115	35	75	27	(20)	(32)	(20)
최소 소요량 ³⁾	515	518	521	523	526	529	531
부족량	Δ31	29	2	95	(75)	(86)	(86)

※ 주 1) 2009/10년까지는 농촌진흥청 자료, 2009/10년은 FAO/WFP 자료

2) 2007/08년까지는 WFP 자료, 2008/09~11년은 상업적수입(중국)과 국제기구지원분

3) FAO/WFP의 1인당 소요량을 북한인구(통계청)에 적용한 수치

4) (괄호)는 불확정 수치임. / 자료 : 농촌진흥청, FAO/WFP, 통계청

32)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http://www.fao.org/docrep/017/al998e/al998e.pdf>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33)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 November 2012), p. 25.

※ 출처: 김영훈, “2012년 북한의 농업·식량상황,”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4호 (2012), p.6에서 재인용.

http://www.krei.re.kr/web/www/45?p_p_id=EXT_BBS&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get_file&EXT_BBS_extFileId=32451401(검색일: 2013년 6월 20일).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주민들의 보건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평균수명에서 나타난다. 1993년과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북한 주민들의 평균수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³⁴⁾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1993년 72.7세에서 2008년 69.3세로 3.4세 감소하였다. 만성적인 식량위기가 건강수준을 악화시켰고 그 후유증이 사망률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3. 자주노선과 대외의존

1)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앞세우고 있다. 노동당 규약 서문에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는다.”라고³⁵⁾ 명시되어 있고 헌법 17조에도 ‘자주, 평

34)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2011, p. 300.

35)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노동신문』, 2012년 4월 12일.

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며 '국가는 우리나라(북한)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당대 당 외교든 국가대 국가 외교든 최고 중요한 원칙은 자주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를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이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⁶⁾ 국제관계의 성격과 내용은 그 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인가 아니면 평등과 호혜의 관계인가를 반영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주성의 실현정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상호존중은 자주성의 이념을 확고히 견지할 때 실현될 수 있는데 자주성의 이념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은 어떤 복잡한 대외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자주적 대외정책을 관철해나가고 있으며 자신의 자주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자주성의

36) 이하 자주 개념에 대해서는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정치·법무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제3권, pp. 267~269 참조.

이념에 따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자주권 존중의 원칙, 호혜평등원칙, 영토완정(territorial integrity)원칙, 불가침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핵심 원칙으로 공식 천명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다. 김일성은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보고하면서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 발전 등에 더해 사회주의 국가들과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주성을 견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중국과 소련이라는 대국에 대한 자주성 견지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관계 확장과 비동맹외교 강화로 나타났다.³⁷⁾

북한에서 주체 확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게 되자 중국과 소련에 대한 소위 ‘사대주의’가 문제시 되었던 1950년대 중반이었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연설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자며 주체 확립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주체 확립 문제는 1956년 초 전당적인 토론을 거쳐 북한 정권의 기본 노선이 되었고, 1958년에 와서는 주체에 대한 개념규정도 공식적으로 시도되는 단계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1956년 8월 종파 사건은

37)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pp. 92~101.

주체 확립 노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 중국과 소련이 상대방을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비판하는 등 사회주의 양대 축들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도 북한의 주체노선 정립 배경으로 작용하였다.³⁸⁾

이러한 배경을 지닌 북한의 자주노선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관통하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로 정착되었고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권력세습의 정통성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북한은 김정일의 최대 유산인 ‘핵보유국과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존엄’이 ‘대국들의 틈에 끼여 파란 많던 이 땅을 영영 누구도 넘겨다보지 못하게, 약소민족의 한 많던 민족을 가슴을 당당히 펴고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존엄 높은 인민으로 영원히 되게’ 해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며 자주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한반도가 열강의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지정학적 숙명론을 비판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론을 주장하여³⁹⁾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의 자주성 견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들어서는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결의안에 찬성한

3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pp. 145-162.

39) 김지영,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령도력-3”, 「조선신보」 2012년 3월 17일.

것 등을 미국에 대한 추종 등으로 강하게 비난하기도 하였다.⁴⁰⁾

북한은 정치,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자신이 천명한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⁴¹⁾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규정하여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사회주의를 포기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에서 강성대국론을 국가전략으로 주창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는 한편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견제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전략을 추진하기도 한다.⁴²⁾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자위적 억제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제한적인 대외군사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대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3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4일; “전면대결전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 「노동신문」, 2013년 1월 26일; 리경수,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는 이중기준의 극치”, 「노동신문」, 2013년 2월 2일;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밟개버릴 것이다”, 「노동신문」, 2013년 2월 14일.

41) 이하 북한의 자주성 견지를 위한 대내외 정책에 대해서는 장용석, “북한의 자주-의존의 딜레마와 헤징전략”,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편,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인식과 대응전략」, 백산서당, 2012, pp. 275~295 참조.

42) 연성균형전략은 제3의 위협세력에 대항하여 군사적 동맹 대신 정치·외교적 관계 강화를 통해 전략적인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개 약소국들이 강대국 간 경쟁을 활용하여 연성균형전략을 추진한다(Lam Peng Er, Narayanan Ganesan, and Colin Dürkop, “Introduction: China and East Asia’s Mutual Accommodation”,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Facing a Rising China in East Asia,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p. 16).

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전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⁴³⁾ 이는 특히 2013년 2월 3차 핵 실험 이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태는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 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핵무력은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립의 원칙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풀어가려는 혁명정신’으로서 자력갱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 자주성의 역설과 대외의존 심화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현실은 국제적인 고립의 심화 속에서 중국과 같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만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외교관계나 경제협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이 자주노선을 견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외적으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주의 토대를 약화시

43) 내적균형전략은 동맹과 같은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이 야기할 수 있는 불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체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상대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Y.: W. W. Norton & company, 2001, p. 157).

키는 자주성의 역설이라는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⁴⁴⁾ 자주노선의 방편들이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내적균형전략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맞서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핵과 인공위성을 대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이 어깨 펴고 살게 해준 유산으로 선전하는데서 확인되듯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우방으로부터의 내정간섭이나 특히 개혁개방과 같은 체제전환 압력에 맞서면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핵무력이 자주권 수호의 믿음직한 담보’라는 김정은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과 보유, 특히 핵보유국 천명은 국제적 독립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하고⁴⁵⁾ 특히 3월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한데 이어⁴⁶⁾ 핵무기의 전력화를 적극 모색하며 기존 핵시설의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변경하여 핵무기 제조용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⁴⁷⁾ 중국마저 북한의

44) 장용석,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헤징(hedging) 전략”, p. 73.

45) “조선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 성공적으로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4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47) “조선 원자력총국 대변인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한데 대해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비핵화에 대한 강한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대북압박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조치에 대한 미국이나 한국의 요구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제재를 완화하고 도발의 성과를 굳히기 위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 우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면 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해도 자발적 핵 포기나 같은 선제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결국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며 지역질서 유지나 변화에서 미국과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도움이 없는 대화 성사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대화’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자주노선 견지를 위한 군사적 내적균형전략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특정 우방에 대한 북한 외교의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대외경제협력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식

량이나 원유와 같은 전략물자를 외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직면하여 외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다수 주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권의 정당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농자재 특히 비료의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유도 외부, 특히 대부분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연간 50만 톤 정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⁴⁸⁾

〈그림 1〉 북한의 원유수입 현황



※ 주: 2009년 수입 감소는 실제 감소가 아닌 4개월 간 실적 미공개에 기인

※ 출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의 원유수입 동향”, 남북협회 북한자원보고서 13-05 (2013년 5월 15일), p. 3.

경제부문의 대외의존도 문제는 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다. 종합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부문에서도 중국산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늘

4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의 원유수입 동향”, 남북협회 북한자원보고서 13-05 (2013년 5월 15일), p. 2

어나고 있다.⁴⁹⁾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근접하고 있다.

〈표 3〉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중	24.7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	78.5	83	89.1	88.3

※ 주: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을 제외한 중국의 비중

※ 출처: KOTRA; 홍익표 외,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2010)」, p. 101의 표에 2011~12년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

4. 민족공조와 대남도발

1) 6·15공동선언과 민족공조론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으로 2001년 1월 10일에 개최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민족공조론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 6월에 개최되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6·15공동선언) 1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명시된 것이었다. 북한은

49) 홍익표 외,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100.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를 민족공조론으로 개념화하였다.⁵⁰⁾ 그러나 북한은 2005년 이후 ‘민족공조’보다는 ‘우리민족끼리’를 더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민족끼리’를 통일문제 관련 최고 이념이자 6·15시대 조국통일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⁵¹⁾

북한은 ‘우리민족끼리’가 명문화된 6·15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강령이라고 본다. 6·15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민족공동의 통일방략이고 통일의 주체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온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한 민족자주선언이며 동족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화합을 이룩해 나가게 하는 민족단합의 선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10·4정상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며 행동지침이라고 본다.⁵²⁾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를 소위 ‘6·15시대’로 규정하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1972년 7·4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와 민족대단결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

50) 통일부, 「2004 북한개요」, 통일부, 2003, p. 453.

51) 통일연구원 편, 「2009 북한개요」, p. 460.

52)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정치·법부문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제3권, pp. 252~253.

한은 자주주의 원칙이 미국을 남한에서 추방하고 외세의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며 외세를 끌어들이는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주성의 원칙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9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로 규정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민족대단결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때 공존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며, 공영은 서로가 함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 간다는 것이고, 공리는 서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 김정일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1998년 4월 남북연석회의의 50주년 기념 토론회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서한을 보내면서 민족대단결을 위한 5대 방침을 제시하였다.

〈표 4〉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년 4월 6일)
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
③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 - 북과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

53) 위의 책, pp. 240~244

-
- ④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

 -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危懼)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

 -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 잡고 나가야 함

 -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
 -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

 - ⑧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

 - ⑨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

 - ⑩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

민족대단결 5대 방침(1998년 4월 18일)

-
- ①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

 - ② 애국애족의 가치, 조국통일의 가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

 - ③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함

 - ④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 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함
-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자주와 민족대단결론에 기초한 우리 민족끼리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공식적인 권력승계 이후 처음인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하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서 전면적 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하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

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소위 반통일세력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는 한편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요구하였다.⁵⁴⁾ 북한의 대남정책 관련 기관들도 이러한 주장들을 되풀이 하면서 소위 외세와 공조하는 반통일세력에 대한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⁵⁵⁾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전략적 행동이다. 우선 대남전략 측면에서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여 남북협력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지닌다. 대내적으로 통일문제를 정권의 정당성 확보 기제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이는 특히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강화하여 정권출범 초기 권력안정화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소위 ‘조국통일대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⁵⁶⁾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진

54)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일.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일;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3일; “6·15공동선언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치”, 「노동신문」, 2013년 6월 2일; 라설하, “북남관계파국을 조장하는 대결정책”, 「노동신문」, 2013년 6월 4일; “온 거레는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괴뢰파당의 반민족적범죄를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5일.

전을 발판으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대외관계를 개선해보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외세, 특히 대북적대시정책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의 공조를 차단하여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완화시키면서 반미세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

2) 이슈별 남한 배제와 대남 도발

북한은 자주와 민족대단결 논리에 입각하여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으로 들어가면 한반도의 핵심 현안 논의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이나 대북지원,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민간교류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지만 한반도 평화안정의 핵심적인 문제인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가급적 남한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나 평

56) “우리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명령”,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17일; 리남호, “조국통일대전으로 민족최대의 숙원을 풀자”, 「노동신문」, 2012년 8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국통일대전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도발자들은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23일; “연평도포격전의 승리를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로 이어갈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강령군 인민들 군민연환모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3일.

화체제 수립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⁵⁷⁾ 이는 북한이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때 미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제공 등을 담은 기본합의를 도출한 것이나, 1990년대 말 남·북·미·중 4자회담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나,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 때 다자회담 이전에 미국과의 회담을 강력히 요구하여 2003년 4월 미·북·중 3자회담을 개최한 것이나, 6자회담 틀 내에서도 미국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킨 것이나, 2011년 미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 및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던 움직임에서 확인된다.

특히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에 남·북·미·중 4자 간 협의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기로 적시하였고,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남·북·미(중)을 염두에 두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평화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한을 핵심이슈 협의에서 제외하거나 견제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지만 남한과의 대화나 협력을 미국과의 대화나 관계개선을 위한 발판 정도로 여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정부 관계자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대변인 중대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6일

들을 괴뢰대통령이나 괴뢰집권자로 비난하는데서 확인된다.⁵⁸⁾

북한은 또한 우리민족끼리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여 대내적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거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제기하여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군사적인 도발도 감행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난 60년 간 군사분계선 지역과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수많은 충돌이 발생하였다.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과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발이었다.⁵⁹⁾

북한의 이러한 남한 배제와 대남도발은 남북관계가 지닌 적대적 공존의 성격과 함께 한반도문제가 남북을 넘어 국제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족단결론에 입각한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강조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5일.

59)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국방부, 2012, p. 49.

제3장

경제·사회 분야의 양면성

1. 계획경제와 개인경제 활동
2. 배급제와 시장
3. 평등사회와 성분차별
4. '혁명의 수도' 평양과 지방

제3장

경제·사회 분야의 양면성

1. 계획경제와 개인경제 활동

1) 전통경제와 계획의 조정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국유제 또는 협동소유제이고, 둘째는 자원배분은 시장이 아닌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며, 셋째는 의사결정권한이 개별 경제주체가 아닌 중앙의 행정 당국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헌법 21조에는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헌법 34조는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관리방법에 대해서 헌법 33조에는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

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 조항에서 살펴본 규정들은 북한 경제체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우선 북한의 계획경제는 1965년 제시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에 의해 운영된다. ‘계획의 일원화’란 경제계획을 경제의 각 부문과 단위들이 자의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한 계획당국의 의도대로 수립하도록 보장하는 체계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내각 국가계획위원회에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감독 등 전권을 부여하고, 성(부), 중앙기관, 지방행정경제기관, 공장·기업소 등 모든 단위에 계획부서를 설치했다. ‘계획의 세부화’란 경제 각 부문과 단위의 계획이 상호 정확히 맞물리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계획당국은 말단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단위들이 수행해야 할 계획지표를 직접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소소한 것들까지 수립하여 내려 보낸다. 계획지표는 주로 현물지표(생산량 목표)의 형태로 할당되는데, 각 생산단위는 내려온 계획지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못할 때는 당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북한경제의 거시적 차원의 제도라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미시적 차원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⁶⁰⁾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에 김일성이 12월 대안전기공장에서 10일간 머무르면서 현지도도를 하고 그 경험을 종합하여 제시한 경제관리방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종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제 대신에 공장당 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기업관리 운영의 중심에 둔다는

60)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 12.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전의 지배인 일인의 의사결정구조를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 종업원 대표들이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원자재를 위에서 책임지고 아래 생산현장에 직접 현물을 날라다 주는 체계이다. 이러한 자재조달 체계는 자재소비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하여 자재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전후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사회주의 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87~1993년의 제3차 7개년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전략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자연재해, 대규모 기아 등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이 기간에 북한의 GDP는 무려 30.0%나 감소하였다.⁶¹⁾

원자재와 에너지의 심각한 부족은 북한의 계획경제를 뒷받침하던 물질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이에 북한의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계획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획의 조정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의 계획경제 전반에 대한 조정은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

61) 위의 책, p. 20

치’(이하 ‘7·1조치’)를 시작으로 적어도 2004년까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계속되었다.

7·1조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기업을 ‘번수입’과 ‘실리’ 원칙에 입각하여 경영하고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며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신 조세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번수입지표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계획지표의 축소와 기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보조금 삭감을 통해 국가 재정능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농산물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의 식량조달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시킴으로써 농산물이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국가로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다. 7·1조치 이후 농촌에서는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시행되어 목표 초과생산물을 자율처분(사실상 시장 판매의 허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셋째는 노동자의 생활비(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급등한 물가에 대해 기존의 임금이 실질소득의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를 반영하여 새롭게 임금 수준을 책정한 것이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한 직장에서 이탈한 노동자들을 다시 복귀시키고자 하였다.

7·1조치가 일시적으로 북한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 정권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선군노선은 국방부문에 경제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됨으로써 국방경제와 인민경제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말았다. 다시 말

해서, 선군노선은 인민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정권에 대한 인민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북한의 제3대 지도자인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며 당과 정부는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였다. 결국 김정은 역시 인민생활향상보다 체제수호를 위해 선대 지도자와 같은 길을 선택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병진노선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계획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경제침체의 늪에서 더욱 빠져나오기 힘들게 할 것이다.

2) 개인경제활동의 유형과 실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의 불가피한 실패를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공간과 수단을 동원하거나 활용한다. 계획의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는 ‘비계획적 경제영역’을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사적 경제영역’이 사라진 국가나 시기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 부문과 사적 부문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사회주의경제의 재생산을 뒷받침 하는 두 축으로 기능했다.⁶²⁾

62) 유승경, “북한에게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Weekly 포커스』, LG경제연구원, p. 36.

북한을 포함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적 경제부문(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은 민간의 소비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보완적인 경제영역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공간문헌에서도 계획경제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제시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에서 2005년에 발행된 경제 관련 해설서에 의하면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다그치자면 사회주의원칙의 요구대로 계획경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시장을 흘시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용하여야하며,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은 국영기업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을 보조적인 공간으로 리용하여 공백을 메꾸는 방향에서 해나가야 한다.”라고⁶³⁾ 명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공식 경제이론에서 시장경제의 존재는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시장경제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과 판매를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북한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자유판매를 실현하는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단지 물자교류시장과 지역시장만이 있을 뿐이라며 시장의 존재가 시장경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⁶⁴⁾ 하지만 북한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경제활동이 존재하며,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원리가 경제자원의 배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63) 서재영 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309.

64) 위의 책, p. 309.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시기에 북한사회에 개인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8년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개인경제활동의 영역이 존속하였다. 농가당 30~50평의 개인 텃밭과 돼지, 닭, 토끼, 염소 등 가내축산업, 가내수공업, 그리고 소규모 가내 과수재배, 그리고 농민시장을 통한 잉여 농업생산물의 자유로운 처분 등이 허용되었다. 이외에도 텃밭을 비롯하여 소, 돼지, 면양, 산양, 양봉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물레방아, 기류 제품 제작, 산채와 약초의 채취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개인부업이 장려되었다.⁶⁵⁾ 그러나 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조합대회에서 채택된 농업협동조합의 새 기준규약에 의해 기존의 개인소유 부문의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다. 텃밭의 경우 이전 기준규약에서는 농가당 70~200평까지 허용되었는데 새 기준규약에서는 30~50평만이 허용되었다.⁶⁶⁾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농민들이 텃밭경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협동농장 출근율이 저조해지는 폐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서 농민시장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라고⁶⁷⁾ 규정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농

65) 홍달선,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로의 줄기찬 지향」, 『경제연구』 (1959), p. 78.

66) 30평은 일반 지대의 농가에 허용된 규모이고, 50평은 산간지대의 농가에 허용된 규모이다. 최창진, 「농촌조세문제의 빛나는 해결」, 사회과학출판사, 1993, p. 334.

67)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 24~25.

민시장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급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농민시장이 자본주의의 잔재로서 그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영을 방해하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물질 토대가 된다고 하면서 농민시장의 폐지를 주장했고, 온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생산력 수준이 높지 못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오히려 농민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이 더 많으며 존속을 주장하였다.

존폐에 대한 당내 논쟁에서 김일성은 “농민들이 닭 몇마리를 좀 비싸게 판다고 하여 그들이 자본가로 되는 것도 아니며 텃밭에 담배를 몇포기 심는다고 하여 그것이 자본주의적 경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라며⁶⁸⁾ 농민시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농민시장에 대한 당내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되고 국가가 주민에 대한 부양의무를 포기하면서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개인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개인경제활동이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개인경제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된 개인경제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텃밭, 땀기밭, 소토지 등 사적 경작이 눈에 띄게 증가하

68)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29~130.

였다. 개인 경작의 증가는 식량배급의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식량조달을 위해 개인 경작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농가만이 아니라 도시 주민의 경우 아파트 주변 빈터나 베란다에도 텃밭을 조성하기까지 했다. 원래 텃밭에는 쌀, 옥수수, 옥수수 같은 곡물작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고 채소와 같은 부식물 경작만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텃밭에는 옥수수 재배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1987년부터 협동농장 작업반을 비롯하여 기관·기업소의 개별 노동자에게도 부업밭(개간되지 않은 척박한 땅, 비경지) 경작이 허용되었다. 규모는 1인당 50평정도이다. 심지어 1995년부터는 군대의 부업밭 경작도 허용하는 지시가 내려졌다. 군인가족은 가구당 100평, 인민군은 1인당 40평의 부업지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허용된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경작하였다.⁶⁹⁾

개인경제활동의 두 번째 유형은 가내작업반과 부업반과 같은 소비재 생산활동이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1984년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기로 활성화된 것으로 직장이 없는 가정부인이나 연로자들이 공장 주변의 폐기물이나 부설물을 이용하여 생필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성원이 3~5명 정도에 불과하고 원료, 자재를 자체로 조달하기 때문에 사적 생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물론 이들은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생산물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지만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

69)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 106~107.

고 생산품이 장마당에 흘러나와 암거래되는 현상이 만연해졌다. 가내작업반에서는 과자, 약품, 술, 신발, 옷 등 다양한 소비품들이 생산되었다. 공업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달리, 부업반은 가정주부나 연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채소, 축산, 물고기, 산나물, 약초 등 주로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두부나 콩나물 등을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파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공장을 불법적으로 차리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고자동차, 광물 및 유색금속, 파철, 공장 자재 및 설비, 골동품 등을 취급하는 밀무역, 사채거래, 외환암거래, 주택거래 등 생계보다는 더 큰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개인경제활동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 개인경제활동에 대해서 200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합법화 또는 제도화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동안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개인경작지들에 대해 국가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조치는 2002년 7·1조치 이후에 나왔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생산량을 늘임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가재정의 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2003년 3월 기존의 농민시장을 확대개편하여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설화하였다. 시장 안에 시장관리소를 설치하여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매달 수입의 일정 비율을 시·군인민위원회 재정부서에 납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수의 원천이 되었다.

현재 북한주민에게 시장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공간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번에 걸쳐 조사한 북한사회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면,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번의 조사 모두에서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자신이 직접 장사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56.8%, 2009년 66.7%, 2011년 69.3%, 2012년 69.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직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사는 북한주민들의 제2의 직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비공식 수입원임을 알 수 있다.⁷⁰⁾ 그리고 개인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주민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⁷¹⁾

2. 배급제와 시장

1) 배급제의 목적 및 운영

흔히 북한의 배급제라고 하면 식량배급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배급제는 공공분배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이다. 북한에서는 식량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비롯

7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 주민 조사 결과 발표」(2012.8.29.), pp. 51~52

71) 위의 조사에서 수입 중 가장 많이 지출한 부문이 '식의주 문제해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2%에 달했다.

하여 의복, 주택까지 포괄한 매우 광범위한 소비재의 분배제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에 북한주민의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배급제의 붕괴라고 함은 식량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담당하던 물적 기반의 총체적인 위기를 의미한다.

먼저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해방 직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1946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5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배급제와 식량 공급제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공식 설명에 의하면, 해방 이후 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영 부문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1946년에는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식량 배급제가, 1947년에는 공업상품을 비롯한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한 배급제가 실시되었고, 전쟁 시기에도 계속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소비품생산이 늘어나 공업상품에 대한 배급제는 폐지되고, 식량 배급제는 식량 공급제로 전환됐다고 설명하고 있다.⁷²⁾ 하지만 북한당국이 구분하고 있는 식량 배급제와 식량 공급제 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1957년에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 데 대하여” 라는 제목의 내각결정을 발표하면서, 당시까지 허용되

72) 「조선대백과사전」 제12권, 백과사전출판사, 1999, p. 298.

던 식량에 대한 개인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모든 식량거래를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도시 주민들의 식량소비는 이후 철저하게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1962년 군(郡)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지도 체계가 도입된 이후 협동농장에서도 사실상의 배급제가 실시되게 되었다.⁷³⁾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식량 배급제를 통해 북한당국은 한축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두 요소인 노동력과 자본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또 다른 한축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와 국방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해방 이후 1990년대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5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국가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식량수요를 통제하여 소비를 최저생존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⁷⁴⁾

도시 주민의 경우 보름에 한 번씩 식량배급을 받게 되어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발부하는 배급표를 수령하여, 이 배급표를 갖고 자신이 속한 식량 배급소에 찾아가 북한당국이 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하게 된다. 식량 배급은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급수가 책정되며 이 급수에 따라 식량이 차등적으로 공급되었다. 식량공급 급수는 모두 9급으로 되어

73)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p. 15

74) 유승경, “북한에게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p. 36.

75) 물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표 5>에 제시된 등급별 정량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있으며, 급수에 따른 1일 공급기준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⁷⁵⁾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 영아에게 주는 분량에 해당되고,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데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이나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받는 공급이다. 흥미로운 것은 성인인 전업 주부의 경우 7급에 해당하는 하루 공급량이 300g에 불과하며, 유치원생과 같은 공급량이다. 이것은 식량배급제가 여성노동력을 최대한 산업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근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전업주부(가두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1~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미만의 영아

※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3」, p. 240.

농민의 경우는 도시주민과 달리 가을추수가 모두 끝난 후 결산분배를 하여 1년치의 식량을 한꺼번에 받는다. 농민의 개별적 총분배액은 의무노력일, 의무가동일, 노력공수 등을 작업정량

표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작업반우대제와 분조 관리제에 의해 추가적인 분배몫이 보태진다.⁷⁶⁾ 예를 들어, 1일 평균 1.2점(노력공수)으로 290일의 노동일을 채우고 분조계획을 달성하면 총330점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다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식량 분배량은 달라진다. 1부류는 토지 경작에 직접 참여한 농장원들이고, 2부류는 농업생산의 간접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예를 들어, 과수반, 기계작업반, 수리반, 관리위원장, 부기장 등)들이며, 마지막으로 3부류에는 농장 안에 있는 이발, 미용, 탁아소 등 편의봉사 해주는 사람들이나 통계원, 부기원과 같이 농장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하급관리들이 속한다. 고정 분배의 경우 1부류는 300kg이고, 2부류는 290kg, 3부류는 260kg가 지급된다. 이외에 나머지 분배몫은 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하지만 농민이 결산분배를 통해 받는 분배량은 일반노동자들이 받는 1년 식량분과 비슷한 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에게도 식량배급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⁷⁷⁾

생필품의 경우, 초기에는 식량 등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건은 국영상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혹은 1980년대 초부터 이른바 상품공급카드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배급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품공급카드에는 식료품 카드와 공업품 카드의 2가지가 있다. 일

76) 작업반우대제는 1998년 12월에 제정된 <농업법>에서 삭제된 이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77)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p. 66~67.

반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공급카드를 받는다. 그리고 1개월에 한 번씩 국영상점에 가서 공급카드를 제시하고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양만큼, 즉 국가가 정한 배급량만큼 물건을 사도록 되어 있다. 즉 1인당 간장은 몇 리터, 된장은 몇 그램, 식용유는 몇 그램, 신발은 몇 켤레, 양말, 속옷, 비누, 칫솔, 치약은 몇 개 하는 식이다.⁷⁸⁾

2)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의 확산

1990년대를 전후로 동구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소련의 해체 등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사회주의 권의 시장이 사라지면서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게다가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대부분의 공장과 기업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생필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국영상점을 통한 상품공급이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농자재의 조달이 원활치 않고 몇 년에 걸친 홍수로 인해 농업생산이 급감하고 결국에는 식량배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급기야 대규모의 기아 사태가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김일성마저 1994년 7월 사망하였다. 결국 북한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긴급구조의 손길을 내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기는 1995년~1997년 기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고 북한주민들은 ‘미공급기’라 부르기도 한다. 북한당국은 식량문제의 해

78)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p.17.

결을 지방과 기업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1992~1993년경부터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미공급기인 1995~1996년경부터는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⁷⁹⁾

사실상 북한은 배급제를 매개로 수령과 주민들 사이에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어 사회질서가 유지되어온 사회체제이다. 다시 말해서, 수령은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시혜를 베풀고, 그 대가로 주민들은 수령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이다. 그런데 수령과 주민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던 배급제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않게 되자 양자 사이의 관계도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주민 개개인은 당장 정치사회적 생명보다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도 벅차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직장 대신 장마당으로 향했으며, 주민들의 생계유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시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비합법적인 시장거래를 허용한 것은 공식적인 배급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구책을 용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비공식적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를 배급제가 중단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한사회에서 시장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었다고 선언된 1958년 이후에도 ‘농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엄연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재 부분에서 국가의 계획부문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79) 위의 책, p. 30.

일일 시장, 장마당, 야시장 등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가 아니라 북한당국이 시장거래를 양성화한 1984년부터로 보는 견해도 있다.⁸⁰⁾

1990년대 이전에 시장은 ‘농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농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주로 농민들이 이용하였다. 시장도 협동농장 휴일에 맞춰 10일장 형태로 개장되었으며, 양곡, 술, 약재, 공업품 등 거래금지 품목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시장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주요 이용자들도 도시민들이었다. 또한 식량, 공업품, 수입품 등 거래되지 않은 품목이 거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이전의 시장은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하였다면, 1990년대 이후의 시장은 생계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농민시장이 점차 장마당으로 변하고 2003년 5월에는 시장이 합법화되면서 공식 시장과 비공식의 시장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2003년 5월 5일 ‘내각 지시 제24호’에 의해 기존의 농민시장은 종합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종합시장 안에는 시장관리소가 설치되어 상인들로부터 소득과 시장시설물 이용 등에 따른 일정한 사용료를 받아내며,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지방예산수입에 반영된다. 또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시세를 고려하여 한도가격과 상품가격을 정해주고, 가격조절 지표상품인 쌀, 식용유, 설탕, 조미료에 한해서 시장한도가격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

80) 위의 책, p. 36.

으로 정부의 시장한도가격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하지 못했다.⁸¹⁾ 이와 같이 당국의 시장개입 실패는 “지역시장관리의 현실태는 행정적 성격의 한도가격설정이나 단순한 가격공시방법으로는 시장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⁸²⁾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평양시에 약 40여개의 시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 단위로 1~2개, 시 단위로는 3~5개의 시장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약 300~350개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공간문헌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농토산물뿐 아니라 식료품과 공업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농장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사고팔고 있다.”⁸³⁾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북한에서 시장은 중요한 경제부문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5년경부터 북한당국은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시장 상인의 자격을 40세 이상의 여성만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2008년 말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되돌아가 시장에서는 농토산물과 가내수공업품만 사고팔도록 거래 품목으로 제한하고 수입품이나 공산품은 국영상점 및 직매점 등에서 위탁, 판매하

81)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평화』 창간호, 2009, p. 156

82) 리원경,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호, 2006, p. 37.

83) 서재영 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p. 199.

게 한다는 시장억제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2009년 말에는 갑자기 ‘화폐교환’을 단행하는가 하면 시장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장억제방침이 발표될 때마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면서 매번 당국의 정책은 뒷걸음질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에서 발견되는 시장영역은 경제체제의 일시적인 혼란의 결과이거나 체제와해의 직접적 징후는 아니다. 오히려 김정일 정권 말기이자 김정은 후계체제가 본격화되던 시기에는 시장을 둘러싼 사회와 국가 간에 경쟁체제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시장(종합시장, 장마당 등)과 광복거리상업중심(대형쇼핑센터)와 같이 당이나 정부가 주도해가는 (유통)시장의 영역이 시장이윤을 둘러싸고 경쟁체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광복거리상업중심과 같이 대형 소비재 유통시장에 당 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종합시장과 장마당의 시장세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소비재 유통망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평등사회와 성분차별

1) 평등사회의 목표와 현실의 괴리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평등’이고, 이 평등 이념이 제도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 것은 정치 부문에서는 남녀차별의 금지이고, 경제 부문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금지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무상의 무교육과 무상치료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한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3대 사회조직-직총, 농근맹, 여성동맹-중에서도 여성동맹의 결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북한 여성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격리 현상,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족질서 등을 볼 때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해방’이라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성을 동원한 결과에 다름없다. 특히,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의 채택으로 남성 노동력이 대거 군대로 차출되면서 산업 부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으로 충원되었다가, 경제 침체로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자 여성은 직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소비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이 조직되어 유희노

동력으로 대거 동원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중단 되자 여성은 장마당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세대주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을 위한 ‘가정의 혁명화’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질서는 엄연히 북한사회에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은 가사일을 전담하고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주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지배-피지배의 생산관계를 청산하였다. 하지만 배급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 간에 새로운 종속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배급제의 중단과 시장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 유사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지배-피지배의 생산관계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우선 사적 소유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는데 1998년에 개정된 헌법(제24조)에 “덧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리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밑줄 강조-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밑줄 친 부분은 이전 헌법에는 없었던 추가된 내용이다. 이것은 식량 미공급 시기에 북한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비법적으로 뺨기밭이나 소토지를 경작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는데 이와 같은 경제행위들과 그 결과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사적 소유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시장경제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소규모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 7·1조치 실시 이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양문수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서비스업체(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수리소, 당구장 등 편의봉사 시설에 해당), 무역회사는 사유화가 어느 정도(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수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당은 사유화가 가장 진전된 분야였다.⁸⁴⁾ 이밖에도 자본주의 경제의 노동 형태의 하 나인 사적인 고용노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에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2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사회변동’ 설문조사에서 주요 수입창 출 활동을 하는데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100명 중에 25명(25%)이 “고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인원수에 대해서는 1~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평등’ 이념의 제도적 실현은 대표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로 나타난다. 북한 헌법 73조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 법」에서는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률은 중등일반교육의 경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된 요 금을 받을 수 없고(제16조),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 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보상하여 저렴한 값

84)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한울아카데미, 2010, pp. 288~290.

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특히, 「보통교육법」에서는 ‘학교 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1항),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9항)에 형사적 책임을 짓게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형법」 제205조에도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 제97조에서는 “가정교사 행위에 대해 돈 또는 물품을 받고 가정교사 행위를 한 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노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노동교양을 시킨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는 무상교육에 관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국가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원칙대로 유지할만한 재정적, 물질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제도와 실제 교육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탁아소를 포함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학부모에게 상당히 전가하고 있다. 교실꾸미기, 학교시설의 보수, 교육 기자재, 학교 난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학부모에게 부담지우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게다가 경제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교원의 생활비도 학부모들이 일부 보조해줘야 하는 현실이다. 학생 개개인들이 쓰는 학용품은 당연히 학부모가 충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농사철에 노력 동원과 고철, 폐철과 같은 자원동원 등으로 시달리면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있

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질적인 부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류층 사이에서는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은 예능교육, 수학과 영어 등의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대학 진학 역시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입학이 훨씬 용이해졌다. 이처럼 북한의 무상교육제도는 사실상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1972년부터 실시해오던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상향하여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열어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하였다.⁸⁵⁾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 하에서 수학, 물리 등 일반 기초지식을 기본으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데는 3대 세습과 만성화된 경제침체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속내가 깔려있다.

무상치료제의 현실도 무상교육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한의 의료정책은 예방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진료소, 시·군병원, 도병원, 평양의 종합병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중앙 및 도 단위의 병원 133곳, 군단위에 601곳, 그리고 리 단위에 진료소 6,263곳이 존재한다.⁸⁶⁾ 그리고 어떤 단위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와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것이

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5일.

86)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통일연구원, 2011, pp. 124~125.

원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사적으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제약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보니 약국이나 약품 매대가 아닌 장마당에서 불법적인 약품 판매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이 경제난으로 제대로 배급과 수입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불법적으로 사설 의료 행위들을 하기도 한다. 진로나 수술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상치료제는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출신성분에 의한 포섭과 배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평등사회’와 가장 동떨어져 있는 제도는 바로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다. 북한의 헌법 65조는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기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제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정견이나 다른 주장,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 재산,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⁸⁷⁾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철저하게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갱신사업, 1989년 10월~1990년 12월 주민재등록사업, 1998년 2월~10월 공민증 갱신사업, 2004년 4월 공민증 교체 발급 등 북한당국은 특정한 사회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성분조사와 주민분류사업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다.⁸⁷⁾ 성분조사 사업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⁸⁹⁾

북한주민들은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세 계층으로 분류된다.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기반 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기본군중은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

87)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4, p. 114.

88)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통일연구원, 2011, pp. 169~170.

89)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3」, p. 226.

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이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45%를 차지한다. 복잡군중은 계급적·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27%를 차지한다.⁹⁰⁾ 이 분류에 따라 북한당국은 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복잡군중의 경우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강제이주를 통해 격리되고 평양이나 주요 도시, 국경지역에 거주할 수 없으며,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고 집중적인 교양학습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학 진학, 군대 입대, 입당 등에 제약을 받으며, 당기관이나 공안 기관 등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 성분에 따라 범죄형량까지 달라진다.⁹¹⁾

흥미로운 것은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있는지 어렵듯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권리나 절차, 서류 등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 군입대, 직장배치, 결혼과 같이 생애주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출신성분은 경로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출신성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도 한다.

90) 조정현 외, 「북한인권백서 2013」, 통일연구원, 2013, p. 174.

91)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pp. 126~127.

4. '혁명의 수도' 평양과 지방

1) 평양의 상징성과 개발계획의 변천과정

평양은 2,629km²의 면적에 행정구역상 19개 구역과 4개 군을 갖고 있어 도농복합형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2003년 기준). 이 중에서 시가지화된 곳은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동대원구, 락랑구역,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등 총 11개 구역이며, 시가지 면적은 약 100km²에 불과하다.⁹²⁾ 인구는 약 325만 명이고 인구밀도는 1,236명/km²다. 평양의 인구는 북한의 총 인구 약 2,400만 명⁹³⁾ 대비 약 13%에 해당되는 수치로, 인구의 1/4이 서울에,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의 사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는 '혁명의 수도'로서 상징성은 갖되, 주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도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북한 당국이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로 해석된다.⁹⁴⁾ 특히 김정일이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할 때 썼

92)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평양시편, 평화문제연구소, 2003.

93) 북한이 2008년에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여 제출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북한의 총인구수는 24,052천 명이다.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p. 20.

94)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평양 도시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953~2011」, 효평출판, 2011, p. 25.

다는 학위논문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의 핵심적인 주장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 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따라 평양을 비롯하여 특정지역이 과밀화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10년에 북한당국은 평양시 남쪽지역인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을 황해북도에 편입해 평양시를 축소 개편한 바 있다.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양시 면적이 57%가량 감소하고 인구도 50만 명 정도 감소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은 평양이 주민에 대한 배급의 부담을 줄이고자 단행한 결정이라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평양시에서 황해북도로 편입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견해는 평양시의 행정구역 축소에 대해 ‘2012년 강성대국’ 목표 아래 평양에서 수도건설부 주도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경지 중심의 일부 군들을 황해북도로 편입함으로써 평양시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⁹⁵⁾

평양의 교통은 대중교통이 주를 이룬다. 도시의 도로망은 잘 발달된 편이지만 개인의 자가용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기타 경제적, 군사적 이유 때문에 지하철, 전차, 버스가 시내 교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평양의 지하철은 현재 3개 노선이 있으며 1970년대에 첫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었다.⁹⁶⁾ 평양의 몇몇 지하철

95)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효평출판, 2011, p. 269.

역은 웅장하고 상들리에와 벽화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체제 선전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평양 시민 중 많은 수가 도심에 거주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평양 내 협동농장에서 일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버스를 통해 출퇴근을 하며, 평양 도심과 그 외 지역은 대부분 방사형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버스는 이 도로를 통해 시 외곽의 협동농장으로 도시 거주 농민들을 수송한다.⁹⁷⁾

다른 사회주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할 수 있는 상징적 광장이나 기념비는 평양의 도시 공간을 조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주의에서는 대중의 선동과 집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러한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대중과 사회를 하나의 이념으로 응집시킬 수 있기에 이를 위한 공간은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평양은 ‘혁명의 수도’로서 매우 치밀하게 상징화 작업에 의해 건설되고 개조·보수·유지되고 있다. 평양의 상징화 작업은 크게 광장의 조직과 기념비의 건설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평양은 여러 개의 위성지역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에 상징적인 광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모든 광장의 중심에는 김일성광장이 위치해있고 평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김일성동상이 있는 만수대기념비광장이 있는데, 이 두 광장 주변에 박물관, 미술

96) 첫 번째 노선인 천리마선은 1960년대 제1차 7개년계획 기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3년 6개 역, 총연장 12km 규모로 개통되었다. 두 번째 노선이 혁신선은 1978년에 9개 역, 총연장 20km 규모로 완공되었으며, 세 번째 노선인 만경대선은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대축전이 열리던 해인 1987년에 1차로 완성되었다.

97)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효평출판, 2011, p. 26.

관, 인민대학습당 등 문화와 교육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평양의 상징화 작업에 쓰인 두 번째 방법인 기념비들은 대부분 전쟁 승리를 기념하거나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건설되었다. 특히 김일성동상은 북한의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로서, 북한의 도시에서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이나 도시 중심부에 조성되어 있다.⁹⁸⁾

한편, 초고층 아파트가 준비한 평양시의 현재적 외관은 1980년대에 주로 조성되었다.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기 위해 1987년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대축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에 선진화된 수도를 선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평양시를 개발조성하였다. 1980년대 평양의 개발 목표와 양상은 크게 도시 확장과 국제도시화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평양은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을 동시에 꾀했는데,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20~30층 규모의 초고층 살림집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평양의 가장 변화한 거리들 중 하나인 영광거리와 창광거리는 이 시기에 새로 건설되거나 재단장되었다. 평양의 수평적 확장은 새로 조성된 문수거리를 시작으로 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만경대구역 내 광복거리와 락랑구역 내 통일거리의 주거지 개발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평양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⁹⁹⁾

1980년대 평양 개발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인 국제도시화를 위해 국제수준에 맞는 문화 및 편의 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개발

98) 위의 책, pp. 88~93.

99) 위의 책, pp. 150~152.

이 이루어졌다.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위락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호텔, 유경호텔, 고려호텔, 양각도 국제호텔 등이 모두 이때 계획되었다. 이중에서 고려호텔과 양각도 국제호텔은 각각 1985년과 1995년에 완공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5층짜리 초고층 유경호텔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공사를 이어오다 경제난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북한의 경제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로 남아있다.

1990년대는 경제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진행 중이던 건설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 경에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자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후계자 김정은의 치적사업으로 2012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 평양 10만호 건설 사업이 계획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재원과 자재 부족 등으로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지역격차의 구조와 실태

북한의 지방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직할시, 도, 시, 군, 구역, 읍, 동, 리, 노동자구¹⁰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결과로 보면, 직할시는 평양직할시 하나이고, 특급시가 남포, 개성, 나선 3개시가 있다.¹⁰¹⁾ 북한의 시도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

로 평안남도 17.35%, 평양 13.94%, 함경남도 13.13%, 평안북도 11.69%, 함경북도 9.97%, 황해남도 9.90%, 황해북도 9.05%, 강원도 6.33%, 자강도 6.33%, 양강도 3.08%로 평안남도의 인구수가 가장 많고, 양강도의 인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후 복구 기간부터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도시화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중공업 우선발전 중심의 산업화와 농업협동화 사업을 통해 농업 부문의 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1953년 전체 인구 대비 도시 인구의 비중이 17.7%에 불과하던 것이 1965년 47.5%로 크게 늘어났으며, 1970년에는 54.2%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증가 비율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1993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1.35%, 농촌의 인구 증가율은 0.43%였던 것이,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전자의 경우 0.88%, 후자의 경우는 0.84%로 도시의 인구증가율은 줄어든 반면에, 농촌인구 증가율은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물론 지역 간 도시화의 격차는 존재한다.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는 도시인구의 비

100) 광산, 임업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등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노동자 성인 4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리' 중에서 노동자가 65% 이상을 차지할 경우 노동자구가 설치된다. 노동자구는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전지대, 공업단지, 염전, 광산지역, 발전소, 어장, 특수 농장 등의 인구 밀집 지역에 도시 형태를 갖추어 설치한 행정단위로 일종의 특수 촌락이다.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pp. 156~158.

101) 나선특급시는 2010년 1월 나선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중이 50% 미만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강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평안남북도는 최소 50%에서 최대 70%에 가까운 도시인구를 가진 행정구역이다.¹⁰²⁾ 그런데 1993년과 2008년 기간에 지역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평양을 제외하고 도시인구의 비율이 낮은 행정구역일수록 북한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즉, 강원도, 황해남북도는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보다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기근의 피해가 더 컸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북한의 지역별 생활수준을 비교해보면, 공식적으로는 수십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생활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주택의 인프라 시설-상수도, 화장실, 난방 및 취사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의 주거단위별 식수 공급원천을 보면, <표 6>에 보이듯 집안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비중이 85.0%이다. 이를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89.5%에 이르지만, 농촌에서의 비중은 78.0%에 불과하다.

<표 6>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가 많이 진척된 시도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집안 수도를 식수 공급원천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집안의

102) 인구 분포 변화에 관한 데이터는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pp. 162~174 참조.

수도를 통한 식수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7%로 평양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78.4%로 황해남도였다. 평안남도 87.7%, 함경남도 85.3%, 함경북도 84.5%, 평안남도 84.2% 등으로 도시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식수 공급비율도 높은 반면에, 황해남도와 황해북도(80.5%)와 같이 농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식수 공급 비율이 낮았다.

〈표 6〉 식수 공급 원천 유형과 구성비 (2008년)

(단위: 가구수, %)

음료수 공급원천	전체	도시	농촌
합계	5,887,471(100.0)	3,579,626(100.0)	2,307,845(100.0)
집안 수도	5,003,904(85.0)	3,204,368(89.5)	1,799,536(78.0)
공동 수도	133,618(2.3)	81,425(2.3)	52,193(2.3)
펌프 우물	501,501(8.5)	202,941(5.7)	298,560(12.9)
보호막이 있는 우물	159,562(2.7)	59,273(1.7)	100,289(4.3)
보호막이 있는 샘물	56,801(1.0)	19,702(0.6)	37,099(1.6)
기타	32,085(0.5)	11,917(0.3)	20,168(0.9)

※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52 재구성

화장실 시설 상태를 살펴보면,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표 7〉에서 나타나듯 북한의 화장실 상황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북한은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이 대단히 낮은 편이다. 〈표 7〉를 보면, 개인수세식 화장실은 58.3%, 공동수세식 화장실은 1.1%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별 차이는 더욱 크다. 도시에서 수세식 화장실(개인+공동)은 67.9%, 농촌에서는 46.2%만이 수세식 화장실이다. 재래식 화장실의 비중이 전

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의 비중이 53.8%에 달한다. <표 7>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행정구역별로 보면 평양시의 경우 76.1%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열악한 지역은 황해남도로 55.1%만이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식수 공급원 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황해남도의 경우는 집안 수도를 통한 식수 공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 화장실 유형 현황과 구성비(2008년)

(단위: 가구수, %)

화장실 유형	전체	도시	농촌
합계	5,887,471(100.0)	3,579,626(100.0)	2,307,845(100.0)
개인 수세식	3,434,306(58.3)	2,374,540(66.3)	1,059,766(45.9)
공동 수세식	65,579(1.1)	58,629(1.6)	6,950(0.3)
개인 재래식	2,045,134(34.7)	858,412(24.0)	1,186,722(51.4)
공동 재래식	342,452(5.8)	288,045(8.0)	54,407(2.4)

※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54 재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는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가지고 계량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간 생활수준의 차이는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에 127명의 탈북자(2011년 탈북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사회변동’ 설문조사 결과, 평양을 제외하고 가장 잘 사는 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평안남도(38.4%)

였고, 가장 잘 사는 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곳은 나천시(37.1%)로 나타났다. 평안남도의 경우 평양을 끼고 있는 행정구역으로 서부지역은 평야지대가, 북부지역은 공업지대가 분포되어 있고 북한 최대 물류기지이자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문화 도시인 평성시가 위치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잘 사는 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잘 사는 시로 꼽힌 나천시의 경우는 중국과 극동 러시아 지역과의 접경지역이고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 상품과 자본이 집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시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장 못사는 도의 경우는 강원도(40.0%)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았고, 가장 못사는 시의 경우는 사리원시(30.3%)가 꼽혔다. 강원도는 군사지역이자 산간지역으로 산업화가 가장 뒤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못사는 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못사는 시의 경우는 물론 사리원시보다 못사는 시가 북한에 있을 수도 있다. 단지 설문문항의 선택지에 신의주, 청진, 나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이 제시되어 있고 이 시들 중 가장 못사는 시로 사리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시들 중에서 사리원을 가장 못사는 시로 선택한 데는 사리원이 유일하게 농촌을 대표하는 지방도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개성을 제외한 다른 시들은 접경지역이거나 항구도시라는 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상품과 자본, 인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농촌을 배경을 한 도시가 잘 못사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HAPTER 4

제4장

주민생활과 가치관 분야의 양면성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2. 공식매체와 비공식정보
3. 사회통제와 일탈
4.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와 인권침해

제4장

주민생활과 가치관 분야의 양면성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1) 공식 담론에서의 개념 차이

집단주의는 북한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1의 사회규범이자 북한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준거이기도 하다. 「조선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이자 노동계급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로서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떠나 살 수 없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는 존재로서 개인의 이익은 집단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리고 집단주의의 원칙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이 구호는 헌법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로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집단주의는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충실하며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데서,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데서 표현되지만, 집단주의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사회주의의 규범적 특징이 잘 나타

난다.¹⁰³⁾

반면에 개인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 위에 올려 세우며 개인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착취계급의 사상, 집단주의에 대치되는 사상으로서 부르주아사상의 핵을 이룬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⁴⁾ 북한의 공식담론에 의하면 개인주의는 사적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고, 빈부의 격차를 만들며 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며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개인주의는 낡은 사상 잔재로 사람들 머리 속에 일정기간 남아있게 되어 개인 이기주의, 공명출세주의, 개인영웅주의, 소충명, 자유주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학습, 강연, 생활총화 등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경제난과 가치규범의 변화

일반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식량위

103) 「조선대백과사전」 제20권, 백과사전출판사, 2000, pp. 214~215.

104) 「조선대백과사전」 제4권, 백과사전출판사, 1996, p. 353.

기와 대기근을 겪으면서 가치관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배급이 중단된 이후 개인들의 시장경제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식이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전에는 배급제에 기반한 강한 사회통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반면에,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에는 사회통제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조직생활에 대한 참여가 저조해짐으로써 집단주의에 대한 내면적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생필품 마련의 어려움으로 생계유지에 급급한 북한주민들에게 집단 중심의 사회지향적인 인생관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반해 북한주민들은 자아와 가족중심의 개인지향적인 인생관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⁵⁾

수십년 동안 집단주의적 사회규범에 의해 사회화된 북한주민들이 단기간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 데는 자신의 생계를 더 이상 국가의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고 개인의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지위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 유입의 증가라는 요인 역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시기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북·중 변경무역이 증가하면서 남한사회의 정보와 문화상품이 북한사회에 유입되었다. 일부 분석에서는 북한사회에서의 한류 바람이 본격적으

105)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p. 166~167.

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를 2004년~2005년경으로 보고 있다.¹⁰⁶⁾ 이 시기는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던 시기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그들이 북한에 사는 동안 남한의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76.7%(전체 응답자 105명 중 80명), 2012년 89.8%(전체 응답자 127명 중 114명)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사회에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은 서서히 집단에 매몰된 자아가 아닌 개성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이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던 집단주의적 인생관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삶이 더 중요한 개인주의적 인생관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집단주의적 가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이중적 가치규범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집단주의적 가치규범에 순응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규범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주민들 스스로 체득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06) 권순철, "북한 전역에 한류가 활짝 피었습니다", <뉴스메이커> 744호(2007년 10월 9일).

3)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공생 관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혁명적 또는 집단주의적 사회규범과 주민들의 개인주의적 사회규범이 논리적으로는 상충성을 갖고 있지만, 이 두 가치규범이 개개인의 실제 생활에서 행위의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는 인지적 구획화(cognitive compartmentalization)가 되어 있다.¹⁰⁷⁾ 이 개념은 국가의 이념과 개인의 규범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분되고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여타 현실사회주의 사회의 주민들은 공적 영역에서 분리된 개인적인 의식 세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그들 생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행위의 지침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 생활환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행위들이 빈번히 국가에 의해 억제되고 때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 역시 인지적 구획화를 통해 당국의 유일 지도체계에 순종적인 처세를 하면서도 동시에 비판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차원에서 소극적인 일탈행위를 사적 영역에서는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가치규범체계가 어떤 행위적 양상과 특징으로 나타나는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¹⁰⁸⁾

107) W. Parish, M. Wyte,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중에서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참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설문문항은 북한의 집단주의가 어떻게 조직생활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표 8>과 같다. 두 조사 모두 참석률이 50%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0%이상이라는 응답률도 2011년 42.0%, 2012년 50.7%로 나타나 여전히 조직생활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북한주민의 주간 생활총화 참석률 (%)

참석률 조사연도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2011년	12.5	10.7	34.8	24.1	17.9
2012년	9.2	16.2	23.8	36.9	13.8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 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pp. 57~58.

반면에 같은 시기의 두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위의 조직생활 질문에 대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조사와 2012년 조사 모두에서 개인이 우선이라

108) 2011년 조사는 2010년에 북한을 나온 북한이탈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2012년 조사는 2011년 북한을 나온 북한이탈주민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서 각각의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2010년과 2011년의 상황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2.2%, 80.8%로 집단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북한주민의 집단과 개인의 가치 순위 비교(%)

조사연도	가치순위	집단이 우선이다	개인이 우선이다
2011년		17.8	82.2
2012년		19.2	80.8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 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pp. 57~58.

위의 대조적인 두 설문 문항의 결과에서 잘 드러나듯이 북한 주민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집단주의 가치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가치규범에 따라 행위를 하는 인지적 구획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주민들 역시 두 가지의 가치규범에 의한 갈등과 혼란보다는 공생(symbiosis)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식매체와 비공식정보

1) 공식매체의 유형과 기능

북한사회에서 공식 담론은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과 같은 공식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매체의 역할은 당의 정책과 노선을 설명하고 대중을 교양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모든 공식매체들은 당의 선전선동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방송의 경우는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제3방송이 있고,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방송, 국제방송으로 외국어 방송 등으로 방송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북한 방송의 보도 이념은 객관성이나 공정성보다는 계급성, 당성, 인민성 등이 중요한 가치이다. 북한 방송의 보도는 속보성 경쟁을 하지 않고 사건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¹⁰⁹⁾ 북한의 방송 보도나 신문의 기사는 철저하게 노동당의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며 제작이나 작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당의 검열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보도 내용 역시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대체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내용이나 당과 관련된 중요행사를 비중있게 보도한다.

현재의 북한방송체계를 확립한 김정일은 TV방송의 편성목적이 전체 당 조직과 북한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 편성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정치선전물을 위주로 편성하며, 당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반복하여 보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¹¹⁰⁾ 이러한 방송 편성의 원칙은 지금까지도 유

109)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 경인문화사, 2006, pp. 8~14.

110)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7년 7월 30일), 「김정일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88.

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출판보도물 역시 방송매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1960년대 중반 당내 종파투쟁이 마무리된 이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출판보도물의 다양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북한의 출판물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관리하며, 출판보도사업은 특히 선전 사업의 핵심으로 중시되고 있다. 일례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책임주필은 조선기자동맹위원장직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직책은 내각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속한다.¹¹¹⁾

또한 북한의 모든 출판보도물은 당과 기관에 소속된 관영출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북한의 신문인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고, <민주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이며, <조선인민군>은 인민무력부와 총정치국 기관지이다. 이처럼 북한에 민영에 의한 출판보도물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언론매체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상 당의 정책과 노선, 목적에 맞춰 각색되고 조작된 정보에 불과하다. 또한 출판보도물의 내용 역시 최고지도자에 대한 위대성 찬양과 이상화를 위한 선전이 주를 이룬다. 출판보도물의 편집과 체제에서 적용되는 인민성의 원칙이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읽기 쉽도록 가독성을 염두에 둔 편집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적 차원의 것이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주민의 기

111) 위의 책, p. 54.

호와 관심을 반영하는 원칙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담론은 유일사상체계의 틀 내에서 획일화와 도식화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점차 주민들의 외면을 받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제작비 부족 등으로 2001년~2010년 기간에 드라마, 만화, 어린이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 제작된 영상물보다는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를 재방송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시장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외부세계로부터 비공식인 정보와 문화상품들의 유입이 급증함으로써 북한의 공식매체의 경쟁력과 기능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 비공식매체의 유형과 사회적 확산

속칭 '알판'이라고 불리는 불법적인 영상물매체의 유통이 초기에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다가 나중에는 북한사회 전역에 매우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북한의 공안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 주요 통계지표보고서의 부록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국경 지역 젊은 층 가운데는 MP3나 노트북을 이용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시청 붐이 일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실시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2008년 63.6%, 2009년 57.1%, 2011년 76.7%, 2012년 90.0%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만으로도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남한의 문화상품 소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매체나 연구자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의 한류의 영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한류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적 현상', '자본주의 황색바람', '남조선 날리리풍'이라며 검열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만큼 남한 문화상품의 유입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입된 남한의 문화상품을 접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하고 문화적 모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탈북과 같은 적극적인 체제이탈 행위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북한사회에 남한의 문화상품이 확산됨으로써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약화되고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문화적 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보는 입장이다. 두 시각은 공통적으로 북한에서 한류가 북한주민의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고 통합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¹¹²⁾

하지만 북한사회에서의 한류 영향력에 대해 과대 해석되고 있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현재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남한 영상물의 총량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수준의

112) 정은미, “북한 한류 연구의 배경, 정보순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KDI 북한 경제리뷰』 제13권 제12호, 2011, p. 91.

관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과도하게 남한 영
 상물의 유입 효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심지어 탈북자 출신 언론인도 북한에서 한류
 의 소비는 계층과 권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국의 통
 제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나, 한류 열풍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견해에 회의적이며 한류가 북한사회
 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행위로 확대발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¹³⁾

북한사회에서의 한류의 영향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입
 장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충족되지 못하고 있
 는 문화적 욕구를 일부분 남한의 문화상품이 대신 충족시켜줌으
 로써 남한의 문화상품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북한 주민에게서 체제비판적 의식이
 형성되어 체제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과잉기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북한사회에서 빠
 르게 늘어나고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이용이다. 이와 같
 은 정보통신매체는 공식매체와 비공식정보의 중간적 성격을 지
 닌다. 2008년 12월에 이집트의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
 이 북한의 체신성과 협력하여 설립한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
 를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데 가입자 수가 매
 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

113) 위의 글, pp. 94~95.

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2012년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자가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고려링크 가입자들은 평양을 비롯해 북한 내 15개 주요 도시, 그리고 100여개의 중소도시에 분포해 있다.¹¹⁴⁾ 이처럼 여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휴대전화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가장 유력한 매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고려링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이외에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속칭 ‘대포폰’인 차명-대체로 중국인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국경 근처에서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장사꾼들이나 브로커들이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이나 남한에 나와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소식이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외부의 소식이 북한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북한 공안기관은 불법적인 휴대전화의 소지나 사용을 매우 철저히 검열하고 있

114) “오라스콤 회장, 北 휴대전화 가입자 150만 명,” 『데일리NK』, 2012년 11월 20일. 이전에 오라스콤은 북한주민의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2009년 3월에는 12만 명, 2010년 6월말에는 18만5,000명이 가입하였으며, 2011년 말에는 56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1년 후인 2012년 11월에 가입자 수가 150만 명에 이른 것을 보면 북한사회에서 휴대폰의 보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며 국경 근처에서는 전파감지기를 통해 통화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북한사회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여 여느 다른 사회에서와 같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이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결코 아니다.

휴대전화 이외에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은 북한사회에서 정보 유통의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인 IT 전문미디어 매체인 IDG(International Data Group)가 밝힌 바에 의하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북한은 1,000여개가 넘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있다. 또한 2000년경에 개설된 인트라넷 ‘광명’을 통해 주요 대학, 도서관, 기업소 등이 접속하여 정보 검색 및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⁵⁾ 2004년 2월 22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인터넷판을 통해 평양 네티즌들의 특징 하나가 새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라면서 “특히 컴퓨터 기술을 전공하는 새 세대들은 대화실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만남’을 백방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북한의 네티즌들은 주로 대학, 기관 등의 ‘컴퓨터소조실’(전산실)을 이용하는데, 내부 컴퓨터망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노동신문>, <평양신문>, 주요 공장기업소 등에 접속해 필요한 정

115) “北 1,024개 인터넷 주소 등록,” 「연합뉴스」, 2010년 6월 15일.

보를 검색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청진 등 주요 도시에는 '정보통신기술판매소'(남한의 PC방과 유사)가 있어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고 채팅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해외 인터넷망과 연결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 외부의 정보 유입이 매우 제한되며, 또한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교환 역시 제한되어 있어 사이버세계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외부세계와의 교류협력이 증가하면서 외부의 정보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장이 정보교환의 중요한 공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식적인 담론이 아닌 사적 담론 또는 제2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두 개의 분리된 여론이 존재하는데, 정치체계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여론과 정치성이 낮은 사적 생활세계에서 형성되는 제2의 여론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제2여론은 흔히 불만집단의 의견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조작된 여론(제1여론)을 거부하고 갈등을 확산, 유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유럽 사회주의의 경험과 같이 저항여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사회에서 제2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북한사회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유언비어들은 제2여론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소문이 개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면, 유언비어는 사

회적, 정치적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언비어의 증가는 시장의 확산, 사회통제의 이완 및 일탈행위의 증가, 정보통신매체의 보급 등 북한의 사회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3. 사회통제와 일탈

1) 사회통제의 수단

북한에서 사회통제는 크게 세 가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사회경제 차원의 통제로 배급제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된다. 1990년대 경제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북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통제의 수단은 배급제이었다. 배급제는 전체 북한 인구의 70% 이상의 식량조달 경로를 북한당국이 독점 장악하고, 성분과 직업에 따라 차등화하며, 심지어 노동자가 타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도 양권(糧券)을 지참해야만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급제는 지역이동의 억제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두 번째 차원의 사회통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직업이나 연령에 따라 당 또는 근로단체 및 사회단체(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등)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은 1945년 11월 30일에 창립된 북한의 최대 사회조직으로 약 160만명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0세

이상이 된 노동자나 사무원이 가입하는데 남자의 경우 65세까지, 여자의 경우는 60세까지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직업동맹은 직장단위로 조직되고 9개의 산별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동맹 다음으로 큰 사회조직 중 하나인 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은 1946년 1월 31일에 창립된 조직으로 30세 이상~65세(여자 60세)의 협동농장원이 가입하는 조직으로 약 130만 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의 경우는 직업동맹보다 더 빨리 창립된 조직으로 1945년 11월 18일 창립되었다. 30세 이상이면서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들이 가입하며, 약 20만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만 14세~30세 이전의 청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그보다 어린 연령의 청소년들은 소년단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한다. 이처럼 거의 모든 북한주민들은 사실상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속된 조직에서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학습, 강연, 생활총화, 노력동원 등을 통해 집단적 결속력을 높이고 개인의 일탈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당국은 공권력을 이용한 물리적 통제를 통해 사회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과 같은 행정기관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질서가 급격히 이완되고 다양한 일탈행위들이 증가하며 선군노선에 따라 군이 직접 사회통제에 가담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인민무력부가 직접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 처벌하기 위해 군 요원을 단위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등에 파견하여 주민들

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⁶⁾

2) 일탈행위의 요인과 유형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조직생활에 점차 권태와 피로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이동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생활총화나 학습 및 강연 등의 조직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조직생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비판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상납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여 조직생활에 대한 허위 기록들을 만드는 일탈 행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직생활에 대한 일탈 행위는 주로 20대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5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들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조직 일탈 행위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과 여성들이 주로 장사를 하면서 지역 이동이 잦기 때문에 발생한다.¹¹⁷⁾

한때 국내에서는 2011년 김정일의 사망을 전후로 하여 북한 급변사태론과 같이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을 과대해석하던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입국하

116)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3」, pp. 255~257.

117)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 175.

는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¹¹⁸⁾ 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미시적 차원에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회변화상들이 분석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가 매우 약화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의 일탈행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 검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다년간 실시하고 있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의 시계열 분석을 보면 북한 공권력의 사회통제가 매우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10>을 보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 번의 조사 모두에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 북한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조사연도 사회통제 수준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잘 유지되고 있다	49.8	38.7	37.2	36.2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50.2	61.2	62.8	63.8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pp. 54~55.

118)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연도별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1999~2001년 1,044명, 2002년 1,143명, 2003년 1,282명, 2004년 1,896명, 2005년 1,332명, 2006년 2,022명, 2007년 2,548명, 2008년 2,804명, 2009년 2,929명, 2010년 2,402

또한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일탈행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 번의 조사 모두에서 정치적 비판 행위가 ‘있다’는 응답률이 ‘없다’는 응답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북한주민의 정치적 비판 행위(%)

비판행위 수준 \ 조사연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매우 많다	11.1	9.5	17
약간 있다	49.1	47.6	52.7	63.1
없다	39.8	41.4	30.3	25.4

※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 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p. 54.

하지만 제3자의 비판 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비판행위가 있다고 응답했던 반면에 비판적 정치행위의 직접적 경험이나 목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2000년 이후에 탈북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 가족이나 남들 앞에서 비판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0.6%(48

명, 2011년 2,706명으로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c=PG0000000365>.

명)이 ‘없다’고 응답했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4%(20명)에 불과했다. 또한 김정일이나 특정간부를 비판하는 벽보나 전단지 등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8.4%(61명)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¹¹⁹⁾ 두 조사의 상반된 결과가 보여주듯이 북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판적 정치행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대체로 탈북자를 준거 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영역에서의 규범과 처벌에 대한 위협심과 같은 의식의 잔류효과가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스탈린 집권 시기의 소련 사회를 분석한 비올라(L. Viola)는 주민들의 저항을 “스탈린주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는 광범위한 연속체의 일부이며, 그 대응에는 수용, 적응, 순응, 무관심, 내면으로의 도피, 기회주의, 적극적 지지가 망라되어 있으며, 이러한 태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개인의 내부에서도 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²⁰⁾ 스탈린 집권 시기 소련 주민들이 보여주었던 행위 양상은 북한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북한주민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국가의 통치행위에 대해 협력, 참여, 동조, 순응, 타협, 유보적 수용, 묵인, 무관심, 무시, 거리두기, 거부, 항의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과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국가에 순응과 협력, 참여 등의 태도를 보인 반면에, 국가가

119) 정은미,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p. 147.

120) Lynne Viola (ed.), *Contending with Stal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 1.

더 이상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은 무관심, 도피, 거부, 일탈 등과 같은 저항 행위를 더 보이고 있다. 물론 상반된 태도들은 처한 상황과 영역에서 유연하게 공존하게 된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사회에서는 생계형 일탈행위들과 비사회주의적 문화 일탈행위들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생계형 일탈행위들로는 소토지나 폐기밭과 같이 비법적인 경지를 경작한다든지, 기업소에 일정한 돈을 납부하고 출근을 면제 받아 장사를 하러 돌아다닌다든지, 개인고용노동을 한다든지, 공장기업소와 농장의 원료나 자재, 생산물의 일부를 절도한다든지, 중국이나 타지역으로 이동을 수월히 하기 위해 관련된 기관의 간부들에게 각종 뇌물을 상납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물론 이외에도 밀수나 마약 등과 같은 강력한 위법행위들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중반 식량난과 기근 이후 양적으로 일탈행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 외에도 '원래는 비법인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계유지라는 당위성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2000년대 들어와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일탈행위로서 북한당국이 소위 '황색바람'이라고 하며 단속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를 사적으로 향유하는 행위이다. 중국을 오가는 상인을 통해 비디오플레이어나 속칭 '알판'이라고 하는 CD가 함께 북한사회에 유입되면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지역과 계

층, 연령의 한계를 뛰어넘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매우 빠르게 파고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북한 당국은 2007년부터 남한의 영상물 시청에 대한 통제를 매우 강화했는데, 2007년 6월 4일 ‘남조선 록화 테이프와 불법으로 규정된 테이프를 엄하게 단속할 데 대하여’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전국에 하달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함경북도 회령, 온성, 무산 등 국경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민보안성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소탕전”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전자다매체, 컴퓨터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등의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위반한 자들을 타지방으로 추방하거나 교화소로 보내거나 또는 모든 것을 무상몰수하는 등과 같이 매우 강력하게 통제가 추진되기도 하였다.¹²¹⁾ 하지만 이미 공식적인 사회규범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되고, 북한당국이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사라지고, 다양한 여가생활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남한의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와 구매 욕구는 강력한 사회통제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1)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pp. 286~287.

4.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와 인권침해

1) 자주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

북한은 인권을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로 본다. 그리고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인권이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실지로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성원의 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²⁾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고수인데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³⁾ 이런 점에서 북한은 정치에서의 자주와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관철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었기에 모든 주민들의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인 우리나라(북한)에서는 인권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도

122)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p. 593.

123)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77; “자주권이 없는 곳에 인권이 있을 수 없다”, 「노동신문」, 2013년 5월 26일.

없으며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¹²⁴⁾

북한은 또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은 동지적 사랑과 상호협조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은 인권을 철저히 보장받고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또한 인권외교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¹²⁵⁾ 인권외교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들고 나온 교활한 침략정책’으로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식의 가치관을 기초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추어 맞지 않으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의 인권외교는 ‘무력으로 이룩하지 못한 침략 목적을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실현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인권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나 주권침해 논리로 반박하거나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국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¹²⁶⁾ 물론 북한

1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4일.

125) “조선외무성 대변인 유엔인권이사회의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2일.

126) 이원웅,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평가”, 『國際政治論叢』, 제47집 1호(2007), p. 221.

도 외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선택적으로 협조하거나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수용적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¹²⁷⁾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인식이나 주장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국제인권 조약에 비준·가입하고 있으며, 실제 규정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조약 등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된 여러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¹²⁸⁾

〈표 12〉 6대 핵심 인권조약과 북한

인권조약	북한	국가정기 보고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개인 통보제도	비공개 조사제도
사회권규약 (ICESCR66)	1981년 가입	○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자유권규약 (ICCPR66)	1981년 가입	○	X (수락선언무)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해당무
인종차별 철폐협약 (ICERD66)	비당사국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여성차별 철폐협약 (CEDAW79)	2001년 가입	○	해당무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X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고문방지협약 (CAT84)	비당사국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아동권리협약 (CRC89)	1990년 서명 1990년 비준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 출처: 조정현 외, 「북한인권백서 2013」, p. 57.

127) 위의 글, pp. 226~228.

128) 조정현 외, 「북한인권백서 2013」, pp. 56~65.

〈표 13〉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권리	관련 법규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행정처벌 법, 인민보안단속법, 검찰감시법, 주민행정법
	평등권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수도평양시관리법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형법, 변호사법, 재판소구성법, 신소청원법, 판결·판정집행법
	법원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해사소송 관계법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출입국법, 주민행정법
	참정권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국적을 가질 권리	국적법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출판법
	가족권, 재산권	가족법, 민법, 상속법, 손해배상법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건강권	인민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광천법
	사회보장	사회보험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인보호법, 아동 권리보장법
	근로권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 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 기준법
	교육 받을 권리(교육권)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 에 대하여
	문화생활 향유할 권리	문화유물보호법, 명승지·천연기념 물보호법, 원림법, 자연보호구법, 광천법
여성차별철폐 협약	여성 권리 보호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협약	아동 권리 보호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기보장법

※ 출처: 조정현 외, 『북한인권백서 2013』, p. 57.

2)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소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주민들의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기에 북한의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에서는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헌법 12조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규정에서 보듯, 북한이 계급적 시각에서 인권을 인식하면서 적대적 세력에 대한 독재를 강조하기에, 결과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¹²⁹⁾ 집단주의적 차원에서 국가주권과 자결권을 강조하고, 서방식 인권개념의 일방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해온¹³⁰⁾ 북한의 인권인식과도 관련된다. 이는 내부의 독재적 성격과 외부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강한 거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인권침해의 피해자이면서 인권개선을 주장할 주체이기도 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또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¹⁾ 북한 당국이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적대적인 체제위협 요소에 대한 통제와 사회주의 질서유지 관점에서 법을 인식하고 시행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도 인권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수령의 시혜로 여기는 정치문화들이 존재하기에¹³²⁾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설정한 인간

129)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2007, p. 39.

130)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10, pp. 18~19

131) 위의 책, pp. 149~152.

132) 위의 책,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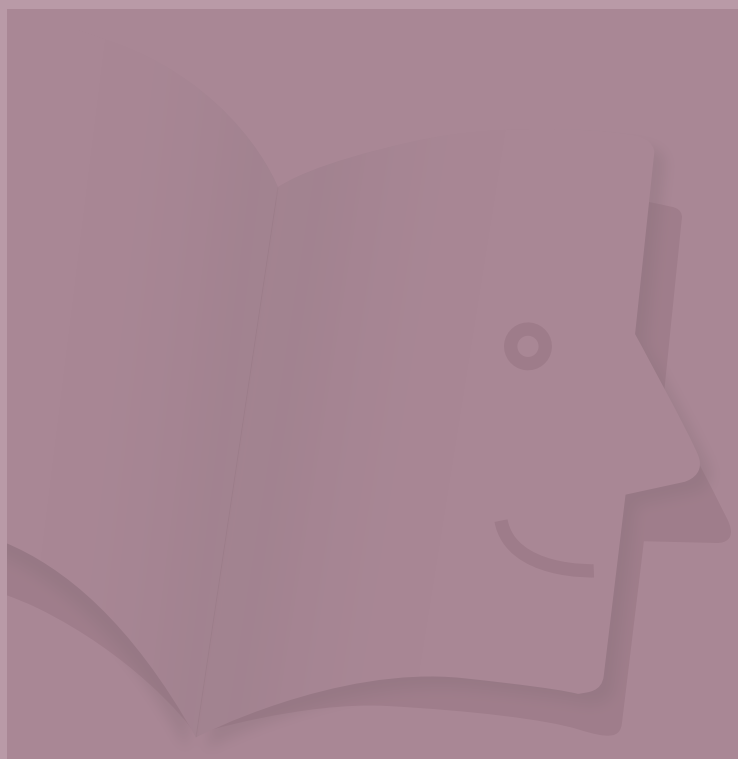
의 존엄 실현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

유형	종류	인권 침해 실태
정치적 시민적 권리	생명권	▷ 폭넓은 사형대상 범위와 포고문 형식의 사형 부과 ▷ 공개처형, 구금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사망, 탈북자 사살 및 강제낙태, 영아살해, 일반적 아사나 영아·산모 사망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구금 및 교정시설 내 강제노동, 고문 및 가혹행위, 열악한 영양 및 의료상황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 정치범 수용소(8~12만명 정도 수용 추정)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재판소 구성과 재판의 독립성 부재(당이 통제) ▷ 형사재판과 상소 절차 위반/상소·변호사 제도 형식적 운영
	평등권	▷ 출신 성분(토대)에 따른 차별 지속 ▷ 탈북자 가족, 남한에 친척 있는 경우, 중국연구자나 화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지속/부패로 인한 차별 확산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 거주지 시·군 벗어날 때 통행증·숙박검열 등으로 통제 ▷ 당국의 주거지 이전 승인, 강제추방 등
	종교 및 양심의 자유	▷ 외세유입·사회질서 침해 수단으로 종교 활용 불가(헌법 68조) ▷ 종교시설 선전용으로 활용, 개인차원 신앙생활 탄압 ▷ 헌법상 양심의 자유 규정 부재, 유일사상 10대 원칙 강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 다양한 법, 제도, 관습으로 알권리, 출판권리, 언론자유 통제 ▷ 당에 필요한 집회·결사만 허용, 자발적 결사체 구성 기회 박탈
참정권	▷ 당의 검열과 선별에 따른 단일입후보제와 찬반투표를 실시 ▷ 선거과정을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원들이 철저히 통제	

유형	종류	인권 침해 실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식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식량부족 상황 지속 ▷ 정치적·사회경제적 계층별 식량에 대한 접근성 불균등 ▷ 지배엘리트와 군부 중심 배급 지속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무상의료제 붕괴, 의약품과 기초 의료기기 절대 부족 ▷ 경제난이 전력, 도로, 응급인프라 등 건강 기초요인 위협 ▷ 정치적·사회경제적 계층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불균등
	근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리배치 등 국가의 직장배치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근로안전 미비, 임금의 비현실성과 미지급 등 ▷ 구금시설·수용소 등의 대가 미지급 노동(강제노동금지 위배) ▷ 출신성분, 당성, 가족적 배경 등으로 직장배치, 차별금지 위배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지역별 편차 확대(가용성 문제) ▷ 무상교육제도 붕괴 등으로 교육기회 차별화 심화(접근성) ▷ 정치사상 중심, 보편적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 소홀(수용성) ▷ 경제난 등으로 학생수요와 사회변화 반영 미비(적합성)
취약 계층 인권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진출 및 지위 향상 극히 제한 ▷ 불건적, 가부장적 질서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식 지속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아동들이 만성적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림 ▷ 교육내용 선택권 부재, 농촌지원 등 노동부담 과중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쟁이 대상 강제 정관수술, 장애인 거주지역 제한 및 수용 ▷ 유엔 장애인권협약 미가입

※ 출처: 조정현 외, 『북한인권백서 2013』, pp. 13~37.



CHAPTER 5

제5장

북한 양면성의 지속과 변화

제5장

북한 양면성의 지속과 변화

이제까지 북한 사회가 지닌 공식적인 가치, 이념, 체계와 실제 현실을 정치·군사, 경제·사회, 주민생활과 가치관 분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 선전 담론들이 현실과 다를 뿐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정권과 주민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체계와 다른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정치·군사 분야를 보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규정한다. 그 본질은 인민민주주의독재로서,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독재지만, 주권자인 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실현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체제와 정권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겪는 구체적인 일상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 정권이 인민대중의 민주주의를 선전해도 피지배집단으로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은 소위 '우리식의 또 다른 독재정권'에 불과할 뿐이다. 북

한이 강성국가를 외치지만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주를 생명보다 귀하다고 자주노선을 강조하지만 실제 현실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소수의 국가들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자주노선을 견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 자주노선의 토대를 침식하는 ‘자주의 역설’에도 빠져 있다.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남한에 대한 견제와 도발도 지속하고 있다.

경제·사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정권 차원의 공식적인 선전이나 설명 또는 정권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공식적인 이념 하에서 국가에 의한 계획과 통제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이제 개인경제활동과 시장은 북한의 사회경제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줄이 되고 있으며 정권도 이에 적응해 가고 있다. 개인경제활동과 시장의 활성화는 개인주의 가치관도 확산시키고 있다. 체제선전과 주민들의 교양사업 등을 위한 공식적인 보도매체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듯하지만 비공식적인 정보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외부의 새로운 소식이나 문화들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가치, 이념, 체제도 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점에서 공식적인 가치나 이념에 가려진 실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들이 향후 북한의 정권과 체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통일연구원, 2011.
-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통계청, 2011.
- 김병로, “북한,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의 목표를 낮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칼럼」 2011년 9월 22일, <http://tongil.snu.ac.kr/index.html>(검색일: 2012년 8월 29일).
-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통일연구원, 2011.
- 김영훈, “2012년 북한의 농업·식량상황”,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4호 (2012).
- 김일기 외, 「통일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통일·북한 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2012.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정일,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7년 7월 30일), 「김정일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의 원유수입 동향”, 남북협회 북한자원보고서 13-05 (2013년 5월 15일).
-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국방부, 2012.
- 리원경,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호, 2006
- 박상일,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원칙”, 「경제연구」 제 158호 (2013년 제1호).
-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 경인문화사, 2006.

-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통일연구원, 2012.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2012.8.29.)
- 서재영 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유승경, “북한에게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Weekly 포커스」, LG경제연구원.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4.
- 이원웅,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평가”, 「國際政治論叢」, 제47집 1호(2007).
-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평양 도시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953~2011」, 효평출판, 2011.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북한 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 (2009).
- 장용석,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헤징(hedging) 전략”,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 (2012).
- 장용석, “북한의 자주-의존의 딜레마와 헤징전략”,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편,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인식과 대응전략」, 백산서당, 2012.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 정우곤,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전략: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2004).
-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평화」 창간호, 2009.
- 정은미, “북한 한류 연구의 배경, 정보순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제12호, 2011.
- 정은미,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정치·법부문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제3권, 백과사전출판사, 2009.
- 「조선대백과사전」 제4권, 백과사전출판사, 1996
- 「조선대백과사전」 제12권, 백과사전출판사, 1999.
- 「조선대백과사전」 제20권, 백과사전출판사, 2000.
-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백과사전출판사, 2001.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 조정현 외, 「북한인권백서 2013」, 통일연구원, 2013.
- 철학연구소(사회과학원), 「철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최창진, 「농촌조세문제의 빛나는 해결」, 사회과학출판사, 1993.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통일부, 2003.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3」, 통일교육원, 2013
- 통일연구원 편,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2009.
-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http://www.bok.or.kr/index.jsp/> (2008년 9월 7일 검색).
-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평양시편, 평화문제연구소, 2003.

한치일, “현시기 원료, 연료의 주체화, 국산화는 자립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제154호 (2012년 제1호)

홍달선,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즐거운 지향」, 「경제연구」 (1959).

홍익표 외,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04 (July 2007).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http://www.fao.org/docrep/017/a1998e/a1998e.pdf>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in_detail/#myAnchor1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Ezrow, Natasha M.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pp. 191–200;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pp. 121~122.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 November 2012)

Fishman, Robert M., “Rethinking State and Regime: Southern Europe’s Transition to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42, No. 3(Apr., 1990)

"Freedom in the World 2013",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3>(검색일: 2013년 6월 20일).

Gandhi, Jennifer,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Doctori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4.

Geddes, Barbara,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June, 1999).


Lam Peng Er, Narayanan Ganesan, and Colin Dürkop, "Introduction: China and East Asia's Mutual Accommodation",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eds.). *Facing a Rising China in East Asia*,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Lynne Viola (ed.), *Contending with Stal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Y.: W. W. Norton & company, 2001.

Parish, W., M. Wyte,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2012", <http://www.fundforpeace.org/global/library/cfsir1210-failed-statesindex2012-06p.pdf>(검색일: 2013년 6월 20일).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목록

- | | | | |
|----|---------------------|----|----------------------|
| 01 |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21 | 북한의 체육실태 |
| 02 |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22 | 북한 문화재 실태 |
| 03 |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23 | 북한의 대남전략 |
| 04 |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렵연합의 교훈 | 24 |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 05 |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25 |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 06 |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26 |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 07 |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27 |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 08 |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하였나? | 28 |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 09 | 남북한 IT 용어 비교 | 29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 10 |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30 |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 11 | 북한법을 보는 방법 | 31 | 북한 여성의 일상 생활 |
| 12 |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32 |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
| 13 |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33 |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
| 14 |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34 |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
| 15 |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35 |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
| 16 |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36 | 북한사람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
| 17 |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37 |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 18 | 북한의 의료실태 | 38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과제 |
| 19 |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39 |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
| 20 |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40 |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1
북한의 양면성

〈비매품〉

발행일 2013년 8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전화 02)722-7123

“북한은 세계적인 흐름을 거부하면서 비민주적이며 억압적인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선전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담론은 북한 현실과 괴리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양면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120-01